

# 제3차 저출산대책포럼

- 일시: 2009년 3월 27일(금) 14:00~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저출산대책포럼
- 후원: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3차 저출산대책포럼

- 일시: 2009년 3월 27일(금) 14:00~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주최: 저출산대책포럼
- 후원: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모시는 말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 우환이라 할 수 있는 최근의 경기침체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조만간 회복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출산 사태는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출생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는 46.6만 명으로 2007년보다 5.5%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8월 이후에는 2007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생아 수가 2005년 바닥을 친 후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의 구호에 힘입어 2006년과 2007년에 반짝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이 앞으로 당분간 높아지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최근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가입여성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년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막바지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feedback)가 활성화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토대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최근 출산율이 다시 하락하는 원인과 그 인과구조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관련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9월 저출산대책포럼의 창립과 두 차례에 걸친 포럼을 계기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학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부담 및 결혼지연요인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새로운 연구결과와 학술정보를 함께 나누시고,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3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 김 두 섭



# 진행순서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개회사: 김두섭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

환영사: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14:20 ~ 14:30    **Coffee Break**

14:30 ~ 16:30    **주제발표**

좌장: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표 1: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전혜정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발표 2: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육 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3: 결혼지연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교수)

발표 4: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제고 대책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6:30 ~ 16:40    **Coffee Break**

**16:40 ~ 17:30    지정토론**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옥선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17:30 ~ 18:00    종합토론 및 폐회**



## 발표 1

#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전혜정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전혜정(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서 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06년과 2007년(1.26)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8년 다시 1.19로 떨어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1.32명, 독일의 1.33명, 영국의 1.84명, 프랑스의 1.98명, 미국의 2.10명 보다 낮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 출산 연령층은 최근 10년간 20대 후반과 20대 전반 여성들의 출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30대 전반과 3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하여, 출산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에 출생한 아이들 중 첫째 자녀가 26만 4000명(53.5%)으로 가장 많고, 둘째 자녀는 18만 3000명(37.1%), 셋째 자녀 이상은 4만 6000명(9.3%)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첫째 자녀가 점점 많아지고, 셋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출생 순위에서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 순위별 비율은 9.8~9.3%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정책들에 대한 수혜자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오산시에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현행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들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인센티브 요인인지, 이들이 원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다자녀 우대 정책 만족도 분석

### 1.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분석

#### 1) 설문 조사의 개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해 정책의 수혜자인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기혼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리고 다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대학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는 면접원들이 응답자들을 개별적으로 면접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설문 조사 대상 및 방법

설문 조사에 있어 응답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을 서울지역, 경기·충청권역, 전라도권역, 경상도권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서울 지역은 주로 중류층이 거주하는 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신정동의 3개 동을 선정하였고, 경기·충청권역에서는 경기도 이천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선정하였다. 전라도 권역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를, 경상도 권역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와 경상북도 영주시를 선정하였다. 응답자는 서울 지역에서 150명과 지방에서 156명을 임의 선정하여 총 설문 조사 인원은 306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조사대상자는 <표 1>과 같다.

<표 1> 거주지별 조사 대상자 수

지역		인원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51명( 16.7)
	노원구 상계동	49명( 16.0)
	양천구 신정동	50명( 16.3)
경기·충청권역	이천시	26명( 8.5)
	천안·아산시	25명( 8.2)
전라도권역	전주시	50명( 16.3)
경상도권역	김해시	25명( 8.2)
	영주시	30명( 9.8)
합계		306명(100.0)

조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0세였고, 기혼 가임 여성이 4.3%, 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32.0%,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52.3%,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 어머니가 11.4%였다(표 2 참조).

〈표 2〉 조사 대상 어머니의 자녀수에 따른 분포

자녀수	인원수(%)
0명	13명( 4.3)
1명	98명( 32.0)
2명	160명( 52.3)
3명 이상	35명( 11.4)
합계	306명(100.0)

조사대상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92명%이었다. 조사 대상 어머니의 직업은 현재 전업주부가 192명으로 취업 상태인 어머니보다 많았다. 취업 중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사무직 37명, 전문직 25명, 자영업 16명에 종사하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사 대상 가구의 가계 소득은 월 평균 200~300만원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이 59명, 100~200만원이 50명, 400~500만원의 순이었다(표 3 참조).

〈표 3〉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분포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학력	중졸이하	3	1.0
	고졸	92	30.1
	전문대졸	68	22.2
	4년제 대졸	128	41.8
	대학원이상	15	4.9
직업	전업주부	192	62.8
	전문직	25	8.2
	경영 관리직	1	0.3
	사무직	37	12.1
	판매 서비스직	5	1.6
	자영업	16	5.2
	기타	7	2.3
	무응답	23	7.5
가계소득	100만 원 이하	5	1.6
	100~200만 원 이하	50	16.3
	200~300만 원 이하	100	32.7
	300~400만 원 이하	59	19.3
	400~500만 원 이하	46	15.0
	500~600만 원 이하	23	7.5
	600만 원 이상	20	6.5
	무응답	3	1.0
	합계	306명	100.0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376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52.0%가 월 소득 200~400만원 이하였다. 따라서 어머니 학력, 직업 및 소득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설문 조사 내용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녀 출산 계획, 출산 동기, 바람직한 출산 및 양육 환경 등에 대한 일반적 배경에 관한 질문, 자녀를 출산·양육하는데 어떤 정책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다자녀 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그리고 현재 실시중인 다자녀 지원 정책의 만족도 평가로 구성된다.

다자녀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질문은 현재 실시중인 정책과 예비조사에서 설문 응답자들이 기업 또는 정부에서 실시해 주기를 원하는 정책들 중에서 자주 언급 되는 것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이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 부분은 현재 실시 중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설문 응답자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의 지원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수혜 절차, 담당자 태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다자녀 우대 정책 설문 조사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조사 내용
일반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동기</li> <li>- 이상적 자녀 수</li> <li>- 바람직한 출산, 양육환경</li> <li>- 양육의 어려움</li> </ul>
다자녀 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li> <li>- 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li> <li>-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li> </ul>
다자녀 지원 정책의 만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양육 지원 세부 정책 만족도 평가</li> <li>- 보육, 서비스 지원 세부 정책의 만족도 평가</li> <li>-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세부 정책의 만족도 평가</li> <li>- 세계 및 주택 마련 지원 세부 정책의 만족도 평가</li> </ul>

### (3) 조사 절차

#### ① 예비 조사

서울의 중류층이 거주하는 3개구(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신정동)에서 기혼 가임여성과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30명을 대상으로 2월 4~8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 ② 본 조사

예비조사 결과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등을 수정하여 2월 11~25일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이 지역별(중소도시, 대도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 2) 설문 조사 결과 분석<sup>1)</sup>

### (1) 이상적인 자녀수

조사대상 어머니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몇 명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반수가 넘는 어머니들이(156명, 53.4%) 2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고, 3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73명(25.0%), 4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36명(12.3%)이었고, 5명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도 20명(6.8%)에 달한 반면 1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7명(2.4%)로 가장 적었다(표 5 참조).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조사대상 어머니들은 2명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1) 주요 변인들이 지역별(중소도시, 대도시)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 실시하였으나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추후 결과 제시는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제시하였다.

〈표 5〉 이상적인 자녀수의 분포

이상적인 자녀 수	빈도수(%)
1명	7( 2.4)
2명	156( 53.4)
3명	73( 25.0)
4명	36( 12.3)
5명	20( 6.8)
합계	292(100.0)

(2) 자녀 출산 계획

조사대상 어머니들에게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74.8%에 달하는 223명의 어머니들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더 낳겠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75명(25.2%)에 불과하였다.

추후의 출산 계획이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추후 출산 계획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자녀가 한 명인 어머니들 중 앞으로 자녀를 더 낳겠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56명(58.9%)으로 과반수가 조금 넘었고, 자녀가 2명인 어머니들의 거의 대부분이(96.8%) 앞으로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가 3명인 어머니들의 94.3%가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했다(표 6 참조).

〈표 6〉 자녀수에 따른 자녀 출산 계획 여부

구분	빈도수(%)
1자녀 어머니의 출산계획	
더 낳겠다	56( 58.9)
더 낳지 않겠다	39( 41.2)
소계	95(100.0)
2자녀 어머니 출산계획	
더 낳겠다	5( 3.2)
더 낳지 않겠다	150( 96.8)
소계	155(100.0)
3자녀 이상 어머니 출산계획	
더 낳겠다	2( 5.7)
더 낳지 않겠다	33( 94.3)
소계	35(100.0)

따라서 현재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어머니는 추가 출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반면 자녀



를 한 명 둔 어머니가 추가적 출산 가능성이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 보고서(2007)의 내용과도 일치한다<sup>2)</sup>.

설문 조사 결과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2.68명 이었지만 현재 한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약 40%정도가,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은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수에 있어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현재 어머니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양육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다자녀 우대 정책에서는 다자녀 가족의 개념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이 아닌 두 명 이상의 가정으로 조정하여, 자녀가 2명 있는 가정부터 정책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자녀가 한 명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적 출산을 위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3) 다자녀 출산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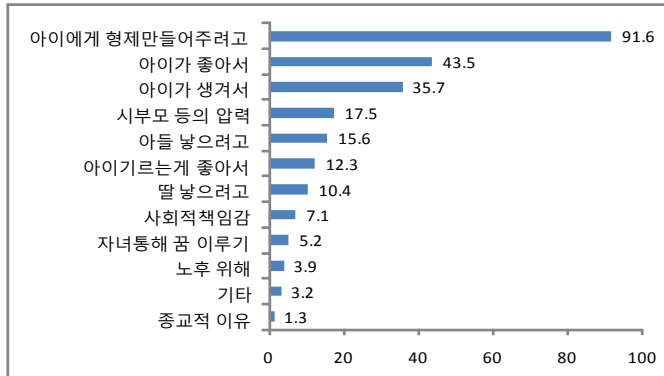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다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들은 어떤 동기와 생각에서 다자녀를 출산하였는지 그 동기를 아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어머니들에게 다자녀를 낳은 동기에 대해 제시한 응답 항목 중 3개의 응답을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91.6%)의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주려고”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43.5%의 어머니는 “아이가 좋아서”, 그리고 35.7%의 어머니는 “아이가 생겨서”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종교적 이유”나 “노후를 위해”, “자녀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어머니들은 그 수가 매우 적었다. 반면 “아들을 낳으려고”와 “딸을 낳기 위해” 다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는 큰 차이가 없어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은 다자녀 출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부모 등의 압력”으로 다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도 그리 많지 않아, 자녀 출산에 있어 양가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의 압력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부부의 결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

2)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 온라인패널 800명의 45.4%와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 300명의 50.0%가 출산예정이거나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정부저출산정책평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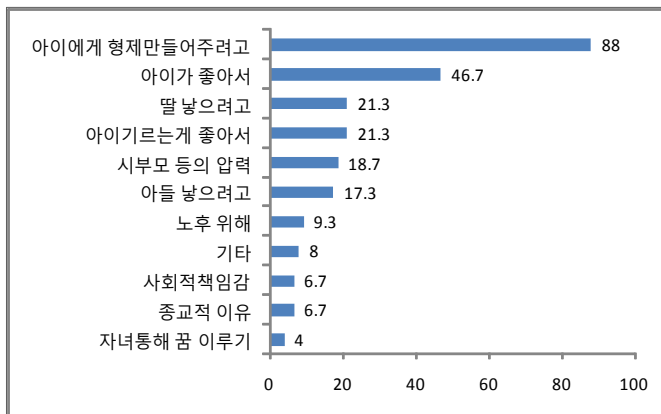
[그림 1] 다자녀 출산 동기(N=154)



(4) 출산 이유/출산하지 않는 이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그 이유를 질문하고 주어진 응답 중 3개를 중복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어머니들은 추가 출산 계획의 이유로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주려고”를 가장 많이 꼽았고(88.0%), “아이가 좋아서”(46.7%), 또는 “아이 기르는 게 좋아서”(21.3%)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딸(또는 아들)을 낳으려고”나 “시부모 등 외부의 압력”은 그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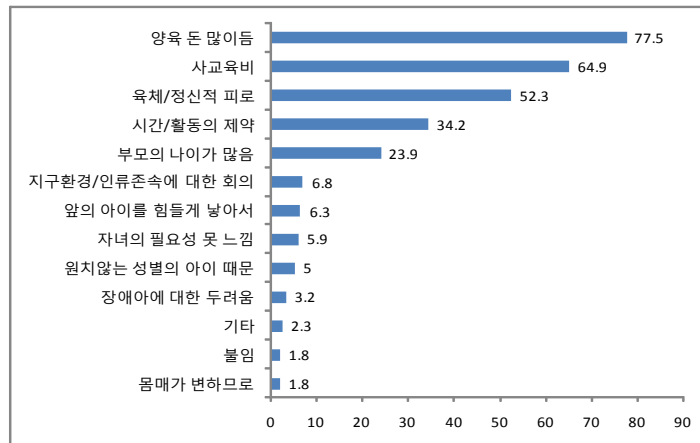
[그림 2] 2자녀 이상 여성의 출산계획 이유(N=75)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고, 앞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222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결정의 이유에 대해 제시한 응답 항목 중 3가지를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어머니가(77.5%) “양육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과중한 사교육비(64.9%), 육체/정신적 피로(52.3%)도 더 이상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되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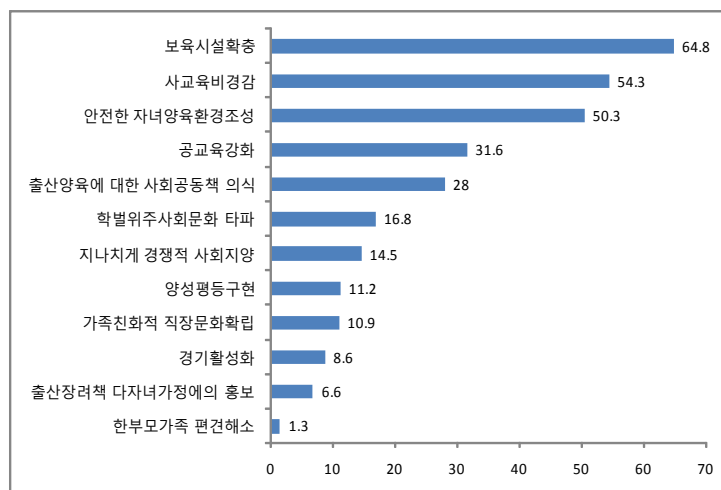
[그림 3] 2자녀 이상 어머니가 추후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N=222)



(5)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여건이 요구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들에게 제시한 응답 항목 중 3개를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림 4]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N=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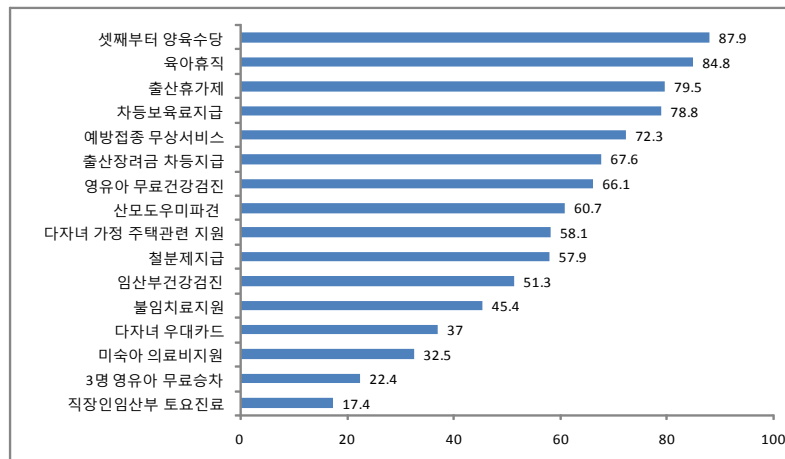


그 결과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어머니(64.8%)가 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사교육비 경감(54.3%), 안정한 자녀양육환경조성(50.3%)도 과반수이상의 어머니가 선택하였다. 공교육 강화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공동책임 의식도 비교적 많이 선택되었다.

#### (6)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의 인지 정도

현재 중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체별로 다양한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정책 수혜자들인 어머니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사업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업은 “셋째 아이부터 양육수당 지급”<sup>3)</sup>으로 조사 대상자 중 87.9%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고, 육아휴직(84.8%), 출산휴가제(79.5%), 차등보육료 지급(78.8%), 예방접종 무상 서비스(72.3%)와 같은 정책은 70%이상의 조사 대상자가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그림 5 참조). 이는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 보고서(2007)”에서 온라인 패널 800명과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저출산 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과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의 인지도가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중 인지하고 있는 비율(N=303)



반면 다자녀 가족 지원책 중에서 직장인 임산부 토요일 진료, 성인을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 승차, 미숙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 우대 카드에 대해서는 40% 미만의 어머니들이 알

3) 현재 서울시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조사대상자 중 서울시 거주자 149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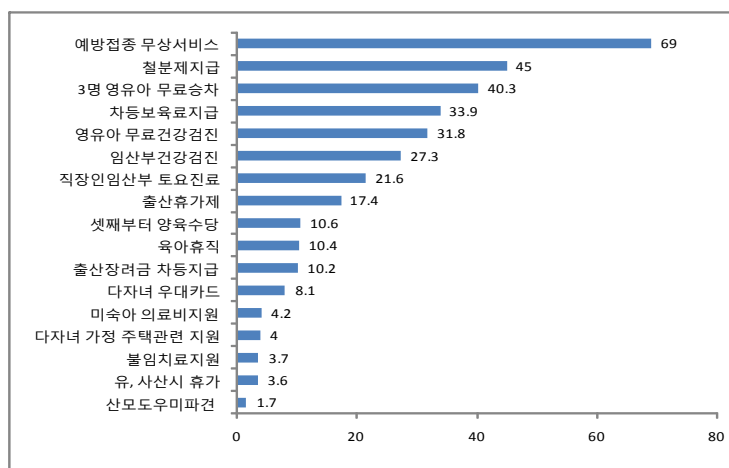
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았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정책 중에서 다자녀 우대카드(37.0%)와 성인을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 승차(22.4%)의 경우 그 인지도가 다른 저출산, 자녀 양육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다자녀 우대 정책 중에 셋째부터 양육 수당 지급(87.9%)과 다자녀 가족 주택 관련 지원(58.1%)은 응답 대상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보의 문제점과 함께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자녀 우대카드, 영유아 무료 승차와 같은 사업보다는 양육 수당 지급과 주택 관련 지원과 같은 사업이 정책 수혜자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혜택이 크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앞으로의 다자녀 우대 정책은 적은 수의 사업이라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홍보의 문제 등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7)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의 혜택 여부

다자녀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아 보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예방접종 무료 서비스는 69.0%의 어머니가 받아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임신 기간 중에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받은 것(45.0%), 성인을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버스 무료 승차(40.3%), 차등 보육료 지급(33.9%),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31.8%)도 비교적 혜택을 받은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그림 6 참조).

[그림 6]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중 혜택을 받은 비율(N=301)



예방접종 무료 서비스, 임신 기간 중 보건소에서 철분제 지급, 차등 보육료 지급은 인지도 측면에서도 응답자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사업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책들은 수혜 대상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다자녀 가족이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유아 무료 건강 검진의 경우 최근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안내책자를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비교적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자녀 가족 지원책 중 성인을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의 경우 인지도는 낮았지만 혜택을 받은 가족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자녀 가족 주택관련 지원의 경우는 알고 있는 가족은 많았지만 혜택을 받은 가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자녀 우대카드의 경우 인지도와 혜택 여부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정책은 다른 저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에 비해 그 인지도와 혜택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정책의 내용 및 홍보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 (8)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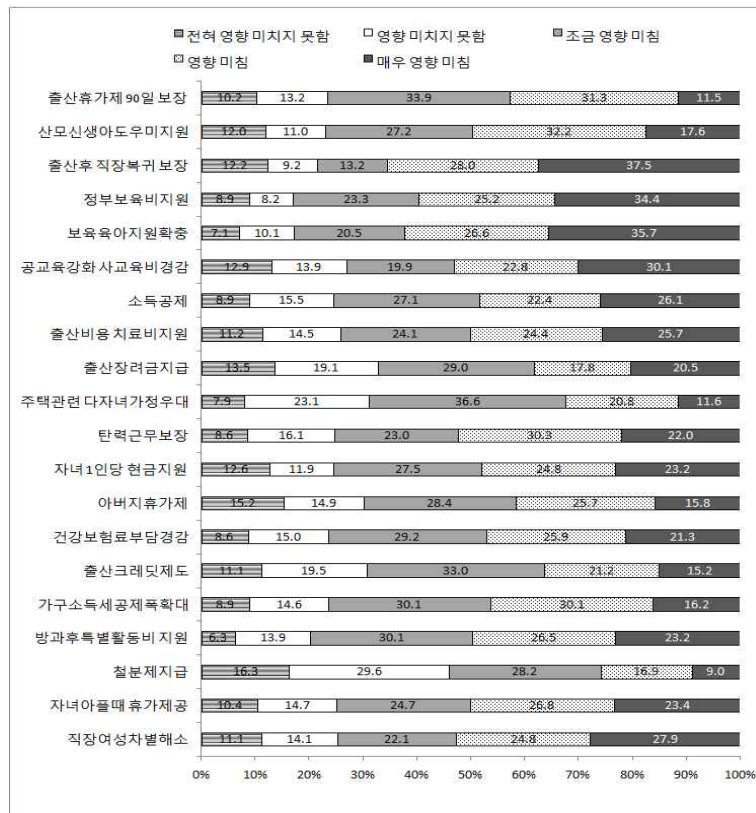
다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제시하고, 각 사업들이 앞으로 다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5점 척도에서 5점을 주어 ‘매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평가한 것은 “출산 후 직장 복귀 보장(37.5%)”, “보육, 육아시설 확충(35.7%)”, “정부의 보육비 지원(34.4%)”,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경감(30.1%)”등 이었다(그림 7 참조).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 어머니들은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 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효과가 더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다자녀 가족 우대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보다는 보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보육과 육아 서비스 시설 확충 등 양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지원이 효과가 더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철분제 지급, 아버지 육아 휴가제,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 주택 구입과 청약시 다자녀 가족 우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임신 기간 중 산모에게 철분제를 지급하는 사업은 인지도도 높고 혜택을 받은 가정도 많았지만 출산 및 다자녀 양육 부담의 경감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자녀 이상을 가진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출산 후 직장 복귀 보장(41.2%)”, “보육, 육아시설 확충(42.9%)”, “정부의 보육비 지원(35.3%)”,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경감(32.4%)”이 앞으로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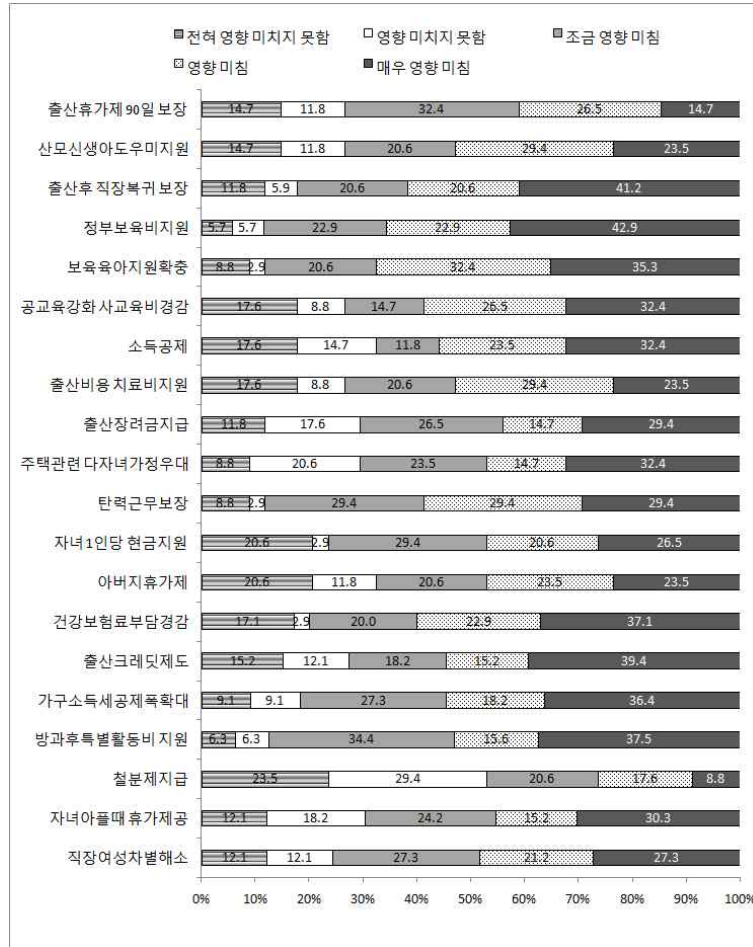
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32.4%), 주택관련 다자녀가족 우대(32.4%), 건강보험료 부담경감(37.1%), 출산 크레딧제도(39.4%), 3인 이상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36.4%), 방과 후 특별활동비 지원(37.5%), 자녀가 이플 때 휴가 제공(30.3%)과 같은 사업들은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N=297~305)<sup>4)</sup>



4) 각 문항별로 응답 대상자의 수가 달랐음.

[그림 8] 다자녀 어머니의 다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N=34~35)<sup>5)</sup>



한,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자녀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간 평가 점수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택관련 다자녀 가족 우대와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들이 그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의 경감, 3자녀 이상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 그리고 방과 후 특별활동비 지원과 같은 다자녀 우대정책에 대해서 한,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가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했다(표 7 참조).

5) 각 문항별로 응답 대상자의 수가 달랐음.



〈표 7〉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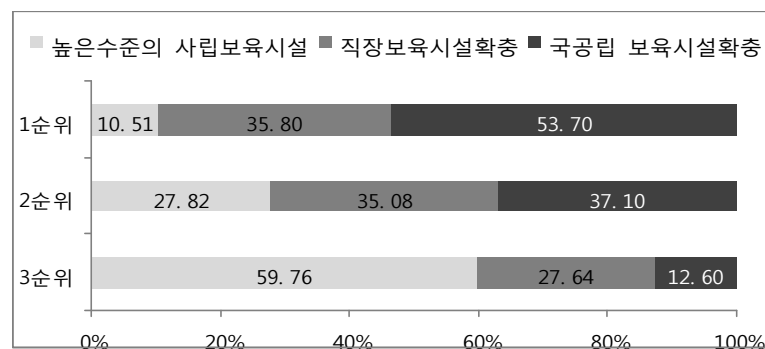
구분	3자녀 이상 어머니 (n = 34~35)	1, 2자녀 어머니 (n = 263~270)	t
주택관련 다자녀 가족 우대	3.41 <sup>a</sup> (1.37) <sup>b</sup>	3.00(1.06)	-2.04 <sup>*</sup>
출산크레딧 제도	3.52(1.50)	3.05(1.16)	-2.12 <sup>*</sup>
3자녀 이상 가구 소득세공제폭확대	3.64(1.32)	3.26(1.15)	-1.57
방과후특별활동비지원	3.72(1.22)	3.43(1.16)	-1.25
건강보험료부담경감	3.60(1.46)	3.33(1.18)	-1.23

주: <sup>a</sup> 평균, <sup>b</sup> 표준편차임. \*  $p < .05$ .

주택관련 다자녀가족 우대 정책과 출산크레딧 제도는 「새로마지플랜」에서 다자녀 우대 정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으로써 수혜자들이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보육과 육아시설의 확충을 원하는 어머니들이 상당수에 달하였는데, 보육시설 중에서 원하는 시설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립 보육시설 확충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 제 1 순위로 선호한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53.7%), 직장보육시설의 확충(35.8%), 질적으로 우수한 사립 보육시설의 확충(10.5%)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면서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9] 확충을 원하는 보육시설 유형의 순위별 응답(N=248~257)<sup>6)</sup>



6)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 응답 대상자 수가 달랐음.

다자녀 지원 정책은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종류도 다르고 효과도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요구하는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업주부 보다는 취업모들이 다자녀 지원 정책이 앞으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은 특히 출산 휴가 90일 보장, 보육과 육아 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비 지원, 출산 후 직장 복귀 보장, 직장 내 여성 차별 해소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산모를 위해 신생아도우미 지원, 아버지 휴가제, 출산크레딧 제도와 임신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는 것은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효과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표 8 참조).

〈표 8〉 전업주부와 직장 여성의 다자녀 지원 사업 효과 평가의 차이

구분	직장여성 평균(표준편차) (n = 91)	전업주부 평균(표준편차) (n = 192)	t
출산휴가 90일 보장	3.42(1.08)	3.09(1.15)	- 2.3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48(1.13)	3.22(1.28)	- 1.76
출산 후 직장복귀 보장	3.96(1.22)	3.58(1.43)	- 2.20*
정부 보육비 지원	4.00(1.04)	3.51(1.34)	- 3.10**
보육·육아시설 확충	4.22(0.95)	3.50(1.31)	- 4.70***
공교육강화 사교육비경감	3.82(1.21)	3.29(1.44)	- 3.04**
소득 공제	3.73(1.11)	3.26(1.34)	- 2.93**
출산비용, 치료비지원	3.70(1.08)	3.25(1.41)	- 2.70**
출산장려금 지급	3.51(1.19)	2.95(1.34)	- 3.57***
다자녀가족 우대	3.32(1.03)	2.91(1.11)	- 3.02**
탄력근무 보장	3.68(1.13)	3.30(1.24)	- 2.54*
현금 지원	3.65(1.14)	3.21(1.34)	- 2.87**
아버지 휴가제	3.23(1.24)	3.06(1.32)	- 1.05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3.60(1.09)	3.23(1.27)	- 2.56*
출산크레딧 제도	3.21(1.12)	3.02(1.24)	- 1.25
3자녀 이상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	3.57(0.99)	3.21(1.24)	- 2.39*
방과 후 특별활동비 지원	3.72(1.01)	3.39(1.25)	- 2.17*
철분제 지급	2.68(1.16)	2.75(1.21)	0.48
자녀가 아플 때 휴가제공	3.67(1.12)	3.27(1.33)	- 2.46*
직장여성 차별	3.88(1.15)	3.26(1.36)	- 3.72***

주: \*\*\*  $p < .001$ , \*\*  $p < .01$ , \*  $p < .05$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출산크레딧 제도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모의 효과성 평가에 차이가 없는 것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출산크레딧 제도는 앞으로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취업모가 전업주부보다 다자녀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결과를 통해 취업모가 전업주부 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육, 육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취업모들이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도 취업모들이 그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 대상의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 취업모의 가정의 평균 소득과 전업주부 가정의 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취업모 가정의 소득이 전업 주부 가정 보다 높긴 하였으나 그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생계 유지형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연구 대상의 특성이 출산 장려금 지급과 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철분제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업주부와 취업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업주부가 그 효과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취업모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철분제를 타러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취업모에게는 그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하고, 전업주부에게는 다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혜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실시되어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출산 계획이 있는 어머니들과 없는 어머니들 간에 다자녀 지원 사업의 효과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출산 후 직장복귀’, ‘정부 보육비 지원’, ‘보육 육아 시설 확충’, ‘출산 비용 지원’, ‘출산 장려금 지급’, ‘3인 이상 가구소득세 공제폭 확대’, ‘직장여성 차별 해소’에 대해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들이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9 참조).

〈표 9〉 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자녀 지원 사업 효과 평가의 차이

구분	출산계획 있음 평균(표준편차) (n= 75)	출산계획 없음 평균(표준편차) (n = 223)	t
출산 후 직장복귀 보장	4.01(1.22)	3.62(1.40)	- 2.18*
정부보육비 지원	3.96(1.16)	3.60(1.29)	- 2.15*
보육·육아시설 확충	4.07(1.12)	3.65(1.25)	- 2.53*
출산비용, 치료비 지원	3.73(1.22)	3.29(1.33)	- 2.65**
출산장려금 지급	3.57(1.25)	2.99(1.30)	- 3.44**
3자녀 이상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	3.59(1.14)	3.22(1.17)	- 2.39*
직장 여성 차별 해소	3.79(1.21)	3.35(1.35)	- 2.60*

주: \*\*  $p < .01$ , \*  $p < .05$ .

(9) 다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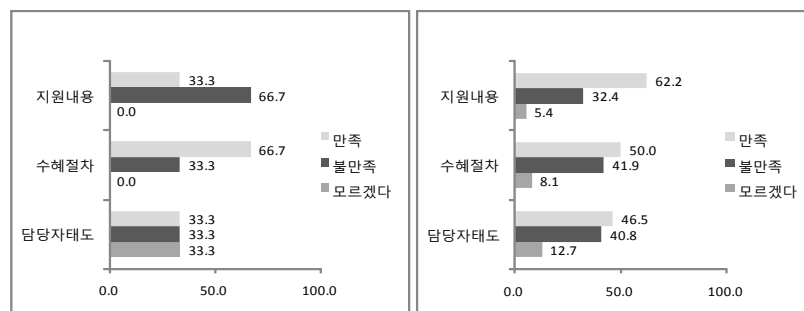
응답자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사업에 대해 각각 알고 있는지, 사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지원 내용, 수혜 절차 및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만족도는 그 사업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체로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산모 도우미 파견”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어머니의 수는 적었지만 그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이후 출산 장려금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 수혜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시의 “셋째 자녀부터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은 만족하지만 수혜 절차와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예방접종 무상 서비스”의 경우 담당자 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대답하는 어머니가 많았다(그림 11 참조).

그림 11의 저출산 지원 정책 중에서 다자녀 가족 우대를 위한 사업은 “셋째 자녀 양육수당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대중교통 이용 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그리고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택 관련 지원”이다. 이러한 다자녀 우대 정책은 일반적인 저출산 및 자녀 양육 사업에 비해서 혜택을 받은 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셋째 자녀 양육수당 지원 13명, 다자녀 우대카드 9명, 대중교통 이용 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27명,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택관련 지원 7명), 그 만족도 역시 영유아 무료승차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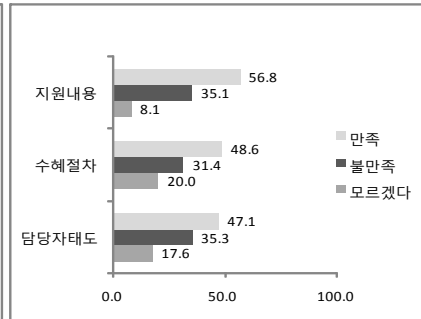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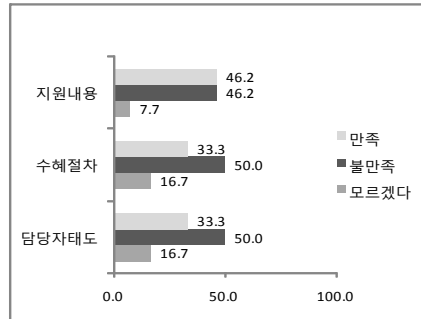
[그림 10] 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1. 산모도우미 파견(N=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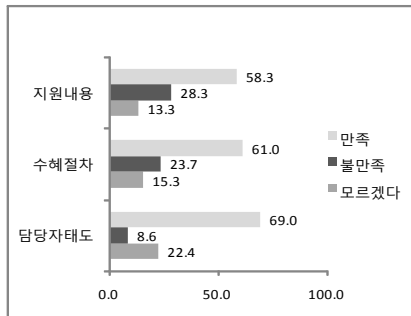
2.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급(N=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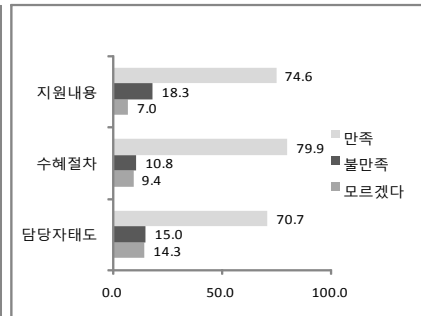
3. 셋째자녀 양육수당지원(서울시민 N=13) 4. 보건소 임신부 건강검진(N=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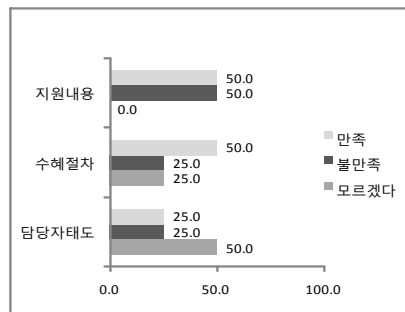
5. 영유아 무료건강검진(N=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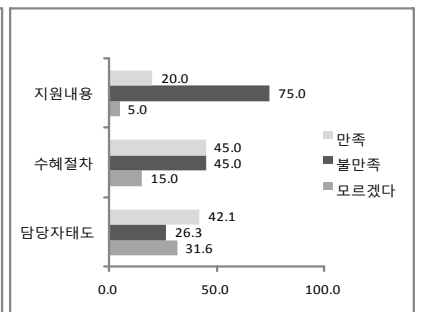
6. 예방접종 무상 서비스(N=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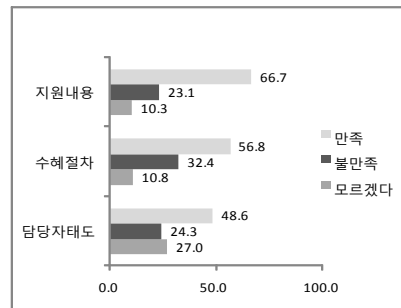
7.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N=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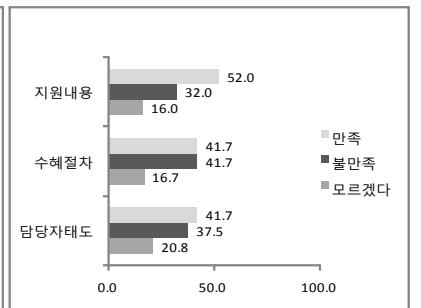
8. 출산장려금 차등지급(N=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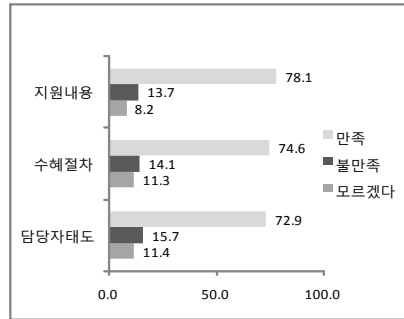
9. 출산휴가제도(N=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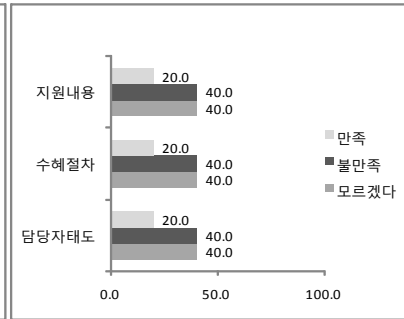
10. 육아휴직(N=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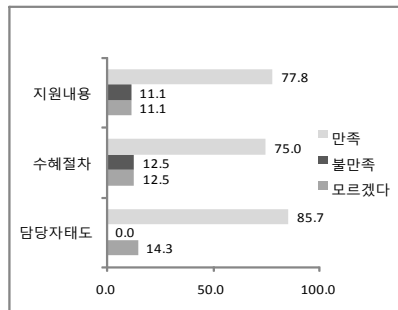
11. 임신부 철분제 지급(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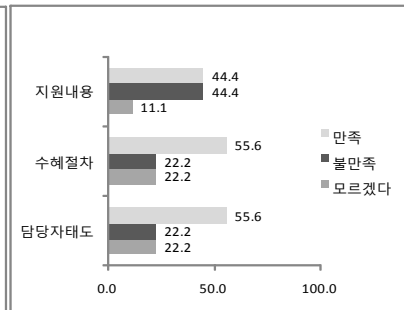
12.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N=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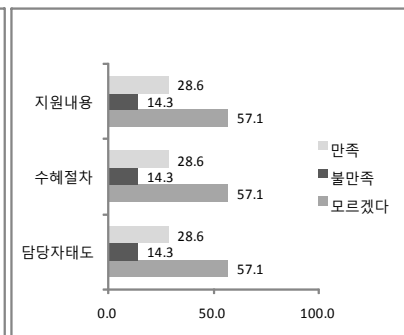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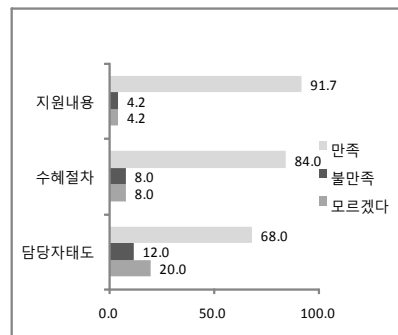
13. 직장인 임신부 토요진료(N=11)



14. 다자녀우대카드(N=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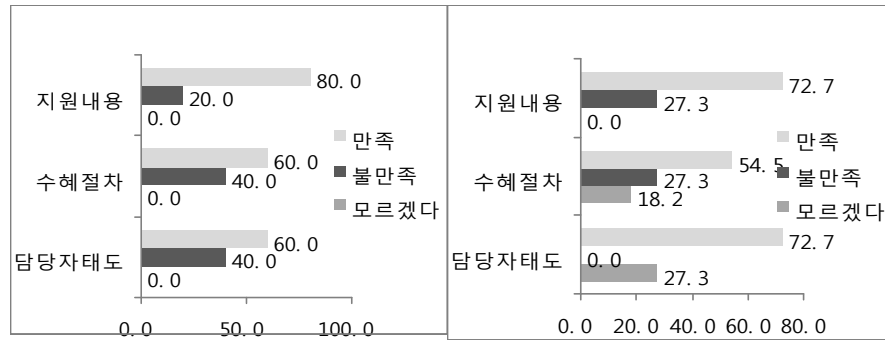
15. 대중교통 3자녀(영유아)무료승차(N=27) 16.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택관련 지원(N=7)



현재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다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의 숫자는 많지 않았으나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들은 “셋째 자녀 양육수당 지원”과 “영유아 무료 건강 검진”에 대해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자녀 가족에게 양육비 및 병원비와 같이 자녀 양육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세 자녀 어머니의 다자녀 지원 사업 만족도

1. 셋째자녀 양육수당 지원(서울시민 N=6)    2.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N=11)



## 2.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만족도 분석

설문조사는 양적 방법론으로써, 객관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특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의 현재 또는 미래의 수혜자인 기혼 가임 여성으로 현재 자녀가 없거나, 한 명~세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제도들이 다자녀 가족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제도들이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인센티브 요인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자녀 가족과 기혼 가임여성 대상 초점집단면접은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로 각각 하나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세 집단, 경기도 오산시에서 세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오산시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집단의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서 한 집단은 8명으로 구성하였다.

### 1) 면접 대상

초점집단면접은 서울시와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현재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둘

계획 중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7회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서울시와 오산시, 그리고 아버지 집단에서 한 집단을 구성한 면접 대상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 서울시 초점집단면접 대상

서울시	면접인원	면접 대상 특성	취업 여부
1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3명 2자녀 어머니: 4명 기혼가임여성: 1명	취업모 6명 비취업모 2명
2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5명 2자녀 어머니: 3명	취업모 4명 비취업모 4명
3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3명 2자녀 어머니: 3명 기혼가임여성: 2명	취업모 5명 비취업모 3명

〈표 11〉 오산시 초점집단면접 대상

오산시	면접인원	면접 대상 특성	취업 여부
1차 FGI	8명	3자녀 어머니: 8명	비취업모 8명
2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3명 2자녀 어머니: 5명	취업모 8명
3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4명 2자녀 어머니 4명	취업모 3명 비취업모 5명

〈표 12〉 아버지 대상 초점집단면접

오산시	인원	면접 대상 특성
1차 FGI	8명	3자녀 아버지: 2명 2자녀 아버지: 3명 1자녀 아버지: 3명

## 2) 면접 방법

면접은 2008년 1월 14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총 7회 실시하였다. 1회 면접 인원은 8명이었고 면접진행자와 기록자가 함께 참석하였다. 면접 시간은 1회에 2시간 30분에서 3



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현재 자녀가 몇 명인지,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자녀를 출산, 양육하면서 정부 혹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이 있는지, 지원 받은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지,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면접자들이 대답하면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 3) 초점집단면접 결과

다음에 초점집단면접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1) 출산 계획

- ◎ 자녀가 1명, 특히 첫째 자녀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현재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둘째를 생각할 여력이 없고, 첫째 자녀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해서 심리적인 여유가 생긴 경우 둘째를 가질 생각이 있다.

현재 8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출산할 당시만 해도 당연히 둘째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현재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사립학교 특수교사, 1자녀 어머니).

현재 5세 여아를 키우고 있다. 얼마 전에 기관에 처음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잘 적응해서 심리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다. 그리고 나니 아이에게 형제 혹은 자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둘째를 생각 중에 있다(프리랜서, 1자녀 어머니).

- ◎ 한 자녀만 둔 어머니의 대부분이 둘째 자녀를 낳고 싶으나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생인 경우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둘째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어머니도 있었다.

첫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더 낳고 싶지 않다. 화장실에서 모유 수유를 한 적도 있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무료로 받기 위해서 집에서 차타고 40분 이상 가야했다. 집 앞에 있는 동사무소 보건소에 갔더니 그 곳에서는 예방접종에 관해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다. 지하철 타고 병원 가면서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아기 기저귀 갈고 싶지 않다(전업주부, 1자녀 어머니).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기본만 해도 120만 원 정도 나간다. 고학년 올라갈수록 단위가 점점 커지니까 둘째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전업주부, 1자녀 어머니).

- ◎ 자녀가 두, 세 명인 경우 대부분의 어머니가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었다. 특히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들에게 부담과 손해가 되어서 더 낳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둘째를 출산할 계획이 있거나 출산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필요해서라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다른 형제에게도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더 낳을 계획이 없다. 아이들도 1자녀, 2자녀 아이들보다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것 같다. 외출 계획을 세워 봤다가도 아이들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불만들이 많다. 부모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전업주부, 3자녀 어머니),

- ◎ 세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어머니의 경우 둘째까지는 계획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으나, 셋째 출산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인 경우도 있었다.

결혼 후 아이를 원했으나 아이가 생기질 않아 병원을 찾아가며 첫아이를 낳고 계획 하에 둘째까지 낳았다. 이후 특별히 피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에 없었던 셋째 임신으로 기존의 두 아이에게 소홀할까 걱정되어 고민하였지만 종교적 신념으로 출산을 결정하게 되었다(전업주부, 3자녀 어머니),

- ◎ 면접에 참여한 아버지 중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 경우는 1명이었고 대부분은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아지거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의 지원이 확대되면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 있다는 아버지도 있었다.

더 이상 낳을 계획이 없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나이인데, 아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교육비이다.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비가 제일 문제다.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팽배해서 엄마들끼리도 피아노, 태권도, 좋은 학원 등 교육비,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회사원, 2자녀 아버지),

## (2) 혜택 받은 정책

### ① 정부 혹은 지자체

- ◎ 세 자녀 가족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셋째 자녀의 보육료 면제, 초등학교 특별활동비 한 과목 면제, 출산 축하금, 임신 기간 동안 철분제 지급, 다자녀 우대 카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세 자녀는 학교에서 한 명 당 한 가지씩 특별 활동비를 면제해 준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학원비도 큰 부담이 되는데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무료로 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 좀 더 바란다면 영어나 컴퓨터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도록 면제 혜택을 주면 좋겠다(전업주부, 3자녀 어머니),

◎ 1, 2 자녀 어머니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았거나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 출산 축하금, 출산 선물
- 보건소에서 철분제 지급, 초음파 검사, 당뇨검사
- 육아 도우미 바우처, 유축기 대여
-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북 바우처
- 영유아 건강검진

현재 ○○구에 거주하는데 육아도우미 신청했고 48,000원의 바우처를 지급 받는다고 했다. 다섯 군데 도우미 업체 중에서 선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보건소에서 유축기도 대여 주고, 초음파 검사, 철분제 지급, 당뇨검사를 해 주었다(전업주부, 첫째 자녀 임신 중),

② 기업

◎ 취업모 본인이나, 비취업모의 경우 배우자가 다니는 기업에서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지원 받은 혜택은 다음과 같았다.

- 취업모의 경우 출산 휴가 90일
- 기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 기업에서 산모 병원비 지급 및 공제 혜택으로 병원비 환급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육아시간, 출산 축하금
- 현대 차 구입 시 자녀수에 따른 할인 혜택

◎ 취업모의 경우 법으로 보장이 되었더라도 공무원, 교사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출산 휴가 후 직업에 복귀한 뒤 모유 수유, 보육 문제 등 전반적인 양육에 어려움이 많다고 대답했다.

첫째 때 출산 휴가를 받았고, 1년 휴직했는데, 1년은 육아 휴직비가 나온다(교육경력, 오봉 경력 모두 산정해서 지급), 추가로 2년 더 휴직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급 휴직이다. 육아 휴직의 경우 현재 법이 바뀌어서 취학 전까지 신청 가능해 졌다. 첫째 때 교육공제회에서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지급받았다(공립유치원교사, 둘째 자녀 임신 중),

출산 휴가 3개월 받았다. 하지만 사립학교라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해주긴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자리가 줄어들면 일순위로 자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다. 3년 휴직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육아시간(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은 받

았다, 원래 퇴근 시간이 4시 반이므로 3시 반에 갈 수는 있지만 아이들 하교 시간이 3시라서 엄밀히 3시 반에 퇴근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녀 양육하는 사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을 부여한다(사립학교 특수교사, 1자녀 어머니),

### (3) 정책에 대한 만족

◎ 지원 받은 정책 중에서 어머니들이 만족한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 보건소 혜택(지역별 차이)
- 출산 축하금

◎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만족과 불만족이 모두 표출되었다. 불만족하는 경우 산모 도우미에 대한 임금을 서비스를 받는 산모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도우미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낮추어서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소득이 좀 낮아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아이 낳고 일주일 있다가 시작해서 2주 정도 도움을 받았다, 좀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친손자처럼 너무 잘해 주셨다, 지금은 소득이 올라서 아이를 낳아도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완화하면 좋겠다(자영업, 2자녀 아버지),

◎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보육료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보육시설 중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보육료 지원이 없었으면 세 자녀 키우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신청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서 만족한다, 하지만 시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지원자가 많아서 대기할 해야 해서 힘들다, 아이가 어릴 때는 집에서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지원이 되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 집에서 돌보고 싶은 어머니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자영업, 3자녀 어머니),

### (4) 정책에 대한 불만족 및 개선 방안

◎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족 내용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면접 대상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 출산 장려금

출산 장려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 같은 시기에 출산을 해도 어느 지역에서 출산했는지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못 받기도 하고, 받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많다. 또한 실제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서울 ○○구에서 출산 장려금을 받은 어머니의 경우 첫 아이는 5만원 상당의 전자 체온계, 둘째 아이는 10만원을 받았다. 받아서 기분은 좋았지만 이것이 향후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 대부분의 정책이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되어 중류층은 혜택을 못 받는다.
-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직장에 복귀하면 모유를 유축할 공간이 없다.
- 아이를 데리고 이동할 때 모유 수유할 공간이 없다(예, 지하철 등 공공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

예방 접종 시 보건소에서는 휴터 안 남는 주사는 없고, 집에서 멀어서 아기를 데리고 가기도 어렵다. 거주지 보건소 중에서도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다. 결국 가까운 소아과를 찾게 된다. 소아과에서 예방접종하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직접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전업주부, 1자녀 어머니).

- 토요일 보건소 이용

첫 아이 때는 토요일에 보건소를 이용했었는데 둘째 아이 때는 주 5일 근무가 시행이 되면서 토요일에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취업모는 거주지 보건소를 토요일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토요일에 쉬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하다. 보건소에서 철분제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매 달 받으러 가야 한다.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한번 찾아가기가 힘들다. 철분제도 산부인과에서 받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면 좋겠다(간호사, 2자녀 어머니).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는 다른 날 와서 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 데리고 한번 병원 가는 것이 어려운데 상담 받으면서 다른 진료도 가능했으면 좋겠다(전업주부, 2자녀 어머니).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연계된 치과 병원이 너무 부족하다(프리랜서 방송작가, 1자녀 어머니).

영유아 건강검진에 안과 검진도 포함시켜주었으면 좋겠다(간호사, 2자녀 어머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 검진이 되는 병원에 대한 리스트도 직접 찾아봐야 해서 여러 가지로 번거롭다. 소아과는 찾아보니 살고 있는 지역에 한 군데 소아과가 있었고 치과의 경우는 연계된 치과를 찾지 못했다. 연계된 치과가 있는 다른 지역에는 갈 수 없다고 했다. 소아과는 이미 가고 있는 곳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지만 치과는 필요한데 오히려 연계병원이 없었다. 그리고 키, 몸무게, 문진 외에 더 심도 있는 검사(예를 들어 발달 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프리랜서 방송작가, 1자녀 어머니).

- 홍보 부족

가장 큰 문제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다. 정부 정책인데 구 별로 내용도 너무 다르고 홍보도 너무 부족하다. 산부인과 혹은 소아과에라도 홍보 책자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인데 집에서 인터넷 안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정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또한 제대로 준비기간 안 된 상태에서 정책 시행(예,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하는 것도 문제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에 안과 같은 곳도 첨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발달이 늦은 애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프리랜서 방송작가, 1자녀 어머니).

-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는 어린이들도 다양한 지원 혹은 정책

-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및 학교의 학기와 같은 기간 운영

- 학교장 재량 휴교일로 인해 취업모의 경우 아이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움

첫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기간이 학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학기 시작 후에 시작해서 방학 2주 전에 끝난다. 만약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방과 후 프로그램 시작 전과 끝난 후에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었을 것 같다. 학교장 재량 휴교일도 문제다. 법정 공휴일 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휴 있을 때 맞춰 학교도 쉬는데 만약 내가 직장을 다녔으면 그때도 휴가를 냈어야 하고 또 방학도 있고 해서 어려웠을 것이다(전업주부, 2자녀 어머니).

- 육아휴직을 쓴 겨우 근무평가에서 불이익

교사 근무 평가에서 육아휴직 쓴 사람에게 무조건 최하 점수를 주기도 한다. 공립이라서 그런 차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실적 없고, 노력하지 않는 교사보다 아이 낳아서 육아 휴직 사용한 교사가 근무 평가 최하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아기를 몇 명 낳았다고 돈을 얼마 주고 그러는 것 보다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공립유치원 교사, 둘째 자녀 임신 중).

- 일관적인 정책 추진

지원을 해주다가 예산이 없다고 중단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줄이는 등 정책이 계속 변화해서 믿을 수가 없다(2자녀 아버지).

### (5) 정부 혹은 기업에 바라는 점

면접 대상자들이 정부나 기업에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 가족에 유류세, 자동차세 할인

유류세, 자동차세 할인 같은 건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기는 너무 힘들다. 예방주사를 맞히러 가는 경우도 택시 아니면 자가용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실제로 아이 데리고 병원 다녀오는 길에 아이가 너무 울어서 젖 물리면서 운전을 한 적도

있다(프리랜서 방송작가, 1자녀 어머니).

- 다자녀 가족에 콜택시 이용 및 택시비 할인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택시비의 50%정도라서 만족도가 높다. 아이 여럿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사립학교 특수교사, 1자녀 어머니).

- 다자녀 가족 차량에 대한 혜택

어린이 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려면 매일 차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요일제를 신청하지 못했다. 그런데 요일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구청 주차장과 같은 관공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자녀가 있는 집은 주차 할인 등 요일제와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셔틀 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회사원, 2자녀 어머니).

- 구립어린이집에 다자녀 가족, 비정규직에 우선 순위 조정

정규직이 아닌 이상 구립 어린이집에 대기자에도 올리지 못한다. 여성들 중에 비정규직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비정규직도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회사원, 1자녀 어머니).

- 시간외 보육 필요

- 정부가 운영하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확대

구립어린이 집은 아이가 6개월이 되어야 보낼 수가 있다. 출산 휴가 90일 끝난 다음에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맡길 곳이 없어서 사립 영아 전담에 맡겼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웠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회사원, 2자녀 어머니).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에산 한도 내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것처럼 아이들 양육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제공해 주고 그 안에서 다자녀 가족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족에 일 년 동안 10만원을 지급해 준다면 그 안에서 기저귀, 분유, 예방 접종비 등 다자녀 가족에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쿠폰 형태로 지급하던지 매장 혹은 병원을 지정해 주든지...(회사원, 둘째자녀 임신 중)

- 다자녀 취업모에게 자기 개발 기회 필요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 해도 자녀를 키우는 동안 자기 개발을 할 수 없어서 좋은 직장에 지원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자기 개발은 안 하고 쉬고 있었던 사람 취급을 받았다(회사원, 2자녀 어머니)

- 베이비시터, 육아 도우미 자격관리

- 사교육비 경감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가족을 위한 배려
 

기차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할 때는 남들 눈치가 너무 보인다, 당연히 모유 수유도 힘들고 어린 아이들이 떠드는 거 통제하기도 어렵다, 기차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고 아이 있는 가족들도 덜 눈치 보게 될 것 같다(공립유치원 교사, 둘째자녀 임신 중).
- 자녀 출산시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 허용
 

최소한 자녀를 출산하고 퇴원할 때만이라도 남편이 옆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아내가 세 아이 모두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수술을 하고나면 2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는 데 집안 어른 중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매우 힘들다, 한 1주일 정도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끝나고 저녁에 병원에 와서 먹고 자면서 아내 수발을 들었다, 너무 힘들고 피곤했다, 수술해서 출산한 사람들에게는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거나 출산 휴가를 1주일 정도 주었으면 좋겠다(회사원, 3자녀 아버지),
-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환경
 

어떤 식당은 초등학생이 3명 이상이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 식당에 들어가려 하자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자녀를 낳으라고 하면서 자녀 있는 가족을 이렇게 천대하는 건 부적절하다(전업주부, 1자녀 어머니),

자질한 지원보다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보육만이라도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육아는 힘든 일이고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전업주부, 첫째 자녀 임신 중),
- 적극적인 홍보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자주 가는 곳(예, 출생 신고 시 동사무소, 산부인과, 소아과)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정리한 책자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부모님을 위해서 TV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회사원, 2자녀 어머니),
- 다자녀 가족에 교복비 지원
- 다자녀 가족에 의료비 감면제도 (치과비용, 안경비 등)
- 다자녀 가족에 가스비, 전화요금 감면과 전기료 감면혜택 확대
 

애들이 많으면 모든 면에서 생활비가 많이 든다, 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비 등 피부에 와 닿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세 자녀가 있으면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는데, 전기를 많이 써야만 감면이 되고 감면비용도 적다, 아껴 쓰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감면액도 늘렸으면 좋겠고 전기료뿐 아니라 가스요금이나 전화료 감면혜택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전업주부, 3자녀 어머니),
-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출산휴가나 가족을 위한 제도를 잘 실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감사 횟수를 줄여준다거나,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기업 내 보육시설



을 만들 때 지원 비용을 증액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회사원, 2자녀 아버지).

- 탄력근무제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는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걱정이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게 된다. 일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부모도 시간을 잘 맞춰서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학원에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회사원, 1자녀 아버지).

### Ⅲ. 다자녀 우대 정책의 활성화 방안

#### 1. 다자녀 우대 정책의 방향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단산으로 끝내는 것은 가임기 남·여가 자녀수를 줄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결과이다. 따라서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남·여가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것이 자신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나 최근 국회예산처(2007) 연구에 의하면 미혼 남·여나 기혼여성들이 희망하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수는 2명을 초과하여 인구 대체 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실제 합계출산율은 2007년 현재 1.26명에 불과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희망과 욕구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부담에 의해 좌절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면 자녀수에 있어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다자녀 양육시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지원책이 제공되는 등 사회 환경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두 자녀 이상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자녀 출산을 꺼리는 현상은 자녀 양육과 교육의 경제적 부담,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반(反)출산 친화적 근로환경 등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결과로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지원제도, 휴직휴가제도, 보육 및 교육지원, 기타 지원책으로 분류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경제적 지원제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면접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다자녀 출산에는 보육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양육비나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OECD회원국들 간의 비교에서도 대체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저출산국에 비해 가족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족수당 혹은 아동수당과 같이 보편적 현금급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 (1) 세금감면 제도

현행 소득세제도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증가할 때마다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씩 늘어나 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하는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둘째 자녀부터는 추가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이 너무 적고,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 비용과 비교할 때 공제액수가 매우 적어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세금 감면을 통해 양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인적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 가족이 실제로 세금 감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현재와 같이 연간 100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50만원 상향 조정하여 200만원, 셋째 자녀는 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금감면제도는 저소득층 다자녀가족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아동수당제도 등 소득지원제도가 거의 없는 우리사회에서 중간 계층 이상의 다자녀 가족 양육부담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다자녀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를 면제하고 있다. 다자녀가족의 경우 분만 시 비용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불해야 할 의료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초점면접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셋째 자녀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일정 비율 경감해 주면 다자녀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휴직 · 휴가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모성출산휴가, 부성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데, 프랑스는 자녀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 제도 설계 시 자녀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

다자녀 가족을 배려하고 있다. 자녀가 많은 경우 출산 후 자녀 양육과 관련한 돌봄 노동이 가중화되어 부·모 모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수에 따라 자녀 출산과 육아를 위한 부모의 휴직·휴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1) 산전·후 휴가 기간의 조정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 90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첫째 자녀는 현행 제도대로 하면서, 둘째 자녀부터는 산후 휴가기간을 5일씩 더 늘리는(즉, 둘째 자녀는 95일, 셋째 자녀는 100일)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산전·후 휴가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이외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산전·후 휴가 기간 중 다자녀 인센티브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아버지 출산휴가

2008년 7월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되어 자녀가 출생한 후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아버지도 3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무급 혹은 유급휴가 여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유급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며, 자녀가 많은 경우 출산 후 돌봄 노동이 필요한 부분이 증가하므로 아버지 출산휴가 기간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화한다면 다자녀가족에 대한 인센티브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 3)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

####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현재 월 소득인정액(4인 398만원) 이하 가구로써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 자녀(만 3~4세)에게 지원 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다자녀 가족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수준을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서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다닐 경우에는 유치원 (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중 둘째 자녀에게는 보육비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 (2) 다자녀 가족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보조비 지원

현재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도가 높으므로 다자녀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시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 (3) 다자녀 가족 자녀를 위한 아동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지원

다자녀 가족이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용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다자녀 가족 자녀를 위한 아동 도서 및 장난감 대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기타 지원제도

## (1)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

현재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 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핵가족이 가족 구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생아 출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요구도가 높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의 수혜 계층을 확대하여 자녀를 출산한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가족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2) 다자녀가족카드의 실효성 확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이름의 다자녀카드를 만들어 발급하고 있는데, 다자녀 카드는 대표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휴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다자녀 가족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크지 않았고 일반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좀 더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다자녀 우대카드 정책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 예로 현재 다자녀카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혜택이 대부분인데,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초등학교 이상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족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 다자녀 가족 차량에 대한 공영 주차장 우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족의 부모들이 사교육비와 의료비의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

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학원이나 의료기관, 대형할인점, 서점과의 제휴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이중 혜택이 가능하도록(카드사 혜택 +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족 차량의 유류세, 자동차세 할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우대카드의 경우 현재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중 금융기관 금리우대제와 같이 그 내용이 좋은 것들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간에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3) 기타

다자녀 가족 자녀의 교복비 지원, 다자녀 가족의 의료비 감면제도(치과비용, 안경비 등),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가스비, 전화요금 감면과 전기료 감면혜택 확대, 유류세 및 자동차세 할인, 다자녀 가족 차량에 대해 요일제 차량과 같은 혜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처럼 다자녀 가족에 출산 및 양육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비용을 지급해 주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취업모 다자녀 가족을 위한 지원 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그 수와 종류에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다자녀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자녀 우대 정책은 독립된 하나의 과제로서 보다는 포괄적인 저출산 지원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 지원을 위해 2008년도에 1,074개 과제에 4조 7천억 원이 배정되어 있어 정부의 저출산 지원과 다자녀 우대 정책 수행의 의지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실효성에 대한 조사 결과, 기본적으로 다자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낮았고, 수혜자들의 만족 정도와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행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현행 다자녀 우대 정책의 보완

다자녀 우대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본 보고서에서 개괄한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더 다양한 사업을 계획,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 조사나 초점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의 결과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수혜자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다자녀 우대 정책 중에 모순이 있거나, 지원의 정도가 미흡한, 혹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수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수혜자들에게 만족도가 높고,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목록 홍보 방안, 치과·안과·전문적인 아동 발달 검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검진 서비스 제공, 거주지 이외의 보건소나 일반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정부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안 등 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 해 주는 방안, 다자녀 가족에게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순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다자녀의 개념 재정립 필요

현재 정부 정책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자녀”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제 II장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 중 다자녀 관련 사업도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둘째 자녀부터 수혜 대상이 되는 사업이 더 많았다. 또한 출산 지원금, 다자녀카드 등 주요한 다자녀 지원 사업이 신생아와 영아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출산 순위에서 세 째 이상의 자녀는 4만 6천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현재 출산율이나 부모들의 자녀 출산 계획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는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 3) 정책 시행 시 일관성 유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는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중단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감면제를 시행하고는 어느 시점에서 감면제를 없애버리거나, 일정 기간 지원을 해주다가 예산이 없다고 갑자기 중단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줄이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수혜자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높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된 사업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4) 정책의 형평성 제고

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시, 도별로 그 수혜 내용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수혜자들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은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와 도별로,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도 구에 따라 차등이 심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중구,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 시 50~10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 100~3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용산구와 양천구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의 8개 구에서는 2008년 3월 현재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 도별로도 경기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시와 강원도는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없이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광주시는 두, 세쌍둥이 출생시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 구성 및 인구 수, 인구 이동,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구에서 출산했느냐에 따라 지원 액수에 큰 차이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따라서 불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수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정책 개발

정책은 수혜자의 특성에 맞추어 시행되었을 때 만족도도 높고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다. 다자녀 지원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혜자가 전업주부인지 취업모인지에 따라 효과가 있는 정책이나 정책의 실행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모의 요구에 맞추어서 취업모의 경우 임신부 철분제 지급은 거주지 보건소가 아니라 직장이 위치한 보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진료 받는 산부인과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

## 6) 보편적인 인구정책으로서의 다자녀 우대 정책 개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자녀 우대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추후에는 보편적인 인구 정책으로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정책 홍보 방안의 다각화 및 적극적인 홍보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홍보 방법도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동사무소 등에서 적극적으로 수혜 내용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홍보”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수요자들에게 정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동사무소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수의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에 다자녀 우대 정책을 홍보하는 책자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담은 자료를 비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는 세대별, 계층별로 홍보 효과에 차이가 커서 정보화 접근성이 떨어지는 연령이나 계층의 경우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자녀 양육에서 어려움과 부담되는 측면만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의 경우 다자녀 출산의 이유로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필요해서, 아이가 좋아서, 아이 기르는 게 좋아서 라고 응답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인식을 고려해 보면 형제·자매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등의 연구 결과 소개, 자녀 양육의 즐거움과 보람 등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등, 다자녀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을 TV 드라마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부각시킨다면 다자녀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6), 제13회 출생동향기본조사(독신자조사).
-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연구보고서.
- 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2006).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
- 일본 내각부(2006), 저출산사회백서(少子化社會白書)
- 일본 내각부(2007), 저출산사회백서(少子化社會白書).
-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여성가족부(2007). 선진국 가족친화정책 연구 및 사례조사 연수보고서. 2007. 9.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2006). 세계여성정책 동향. 출산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프랑스 편.
- 유해미(2005).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입법정보 제179호.
- 윤홍식(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3), 341~370.
- 장지연(2005).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ECD 자료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장혜경, 홍승아, 송치선(2005).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 특별위원회.
- 조애저·김형모·김유경·이상현·이재연 (2000).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채구묵(2005).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연구, 57(3), 337~361.
- 총무성(2005), 국세조사.
- 한국개발연구원(2008).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홍승아(2005). 복지국가 모성정책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후생노동성(2006), 국민생활기초조사.
- ADECRI(2005). The french social protection system.
- Anne Pla, INSEE PREMIERE No.1170, 2008.
- Caussat, L.(2006a). 프랑스의 출산경향 및 가족친화정책,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66~74.
- Caussat, L.(2006b).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과 출산장려정책: 양자간의 상관관계 연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 발표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l'Essentiel, No.55, 2006.

Handelsblatt, 2007년 3월 3일.

OECD(2004), Employment Outlook

OECD(2007),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Piketty, T, Impact de l'aa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sur l'activité féminine et la fécondité en France, in Cécile Lefèvre (ed.), Histoires de familles, histoires familiales, Cahiers de l'Ined, n° 156, 2005

Spiess, Katharina(2006). Familienbezogene Politiken in Deutschland. Frankreich und Grossbritannien. gender politik.

통계청; [www.nso.go.kr](http://www.nso.go.kr)

<http://www.bmfsfj.de/bmfsfj/generator//Politikbereiche/familie,did=97820.html>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

<http://www.insee.fr>

<http://www.issa.int/germ/homef.htm>

<http://www~ssw.issa.int/sswge/lpext.dll?f=templates&fn=main~h.htm&2.0>

[http://www.ipss.go.jp/ps~doukou/j/doukou13\\_s/doukou13\\_s.asp](http://www.ipss.go.jp/ps~doukou/j/doukou13_s/doukou13_s.asp)

<http://www.stat.go.jp/data/kokusei/2005/kekkgai.htm>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k-tyosa06/1-3.html>

<http://www.city.shinagawa.tokyo.jp/hp/page000000900/hpg000000850.htm>

[http://www2.city.atsugi.kanagawa.jp/kougyou/angel\\_s/page\\_16063.html](http://www2.city.atsugi.kanagawa.jp/kougyou/angel_s/page_16063.html)

<http://www.i-oyacom.net/prepass/prepass.html>

<http://www.nakagawakousan.com/newhouse/>

<http://www.suginami-kosodate.jp/ouenken/tick00.html>

발표 2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

신 윤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육·교육비 부담정도에 관한 연구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서론

과거 1960년대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 인구대체수준인 2.1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1990년대 중반까지 1.5~1.7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다. 1997년 외환위기를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의 최저 수준인 1.08을 기록하게 되었다. 2007년에 출산율은 1.26으로 상승하여 어느 정도 하락추세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제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중 특히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지출하는 보육·교육비가 경제적인 이유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4). 실로 2004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77.2%가 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대다수가 교육비로 인하여 부담을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괄목한 만한 경제 발전은 높은 자질의 우수한 노동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바가 크며 이러한 이면에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 부모들의 교육열이 큰 몫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공교육의 기능은 저하되고 사교육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 인프라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자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부모들이 자녀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지만 실증적으로 이러한 부담 수준이 실제적으로 자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보육·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자녀 출산

의향이 낮아지면 결국 부모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며 이러한 출산 기피 현상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본 고에서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의 보육 및 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본 뒤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설명한 후 자료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동 연구에서는 전화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기술 분석과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정책적인 제언을 제공한다.

## 2. 이론적 배경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인적자본이론, 선별가설, 소비자 수요 이론, 자녀 수와 자녀 질의 모형에서 논의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동 연구의 가설 및 모형 설정을 위해 각 이론들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 보고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물질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지닌 능력 및 지식, 기술, 경험, 건강 태도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기술 등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비형식 혹은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뿐 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의 훈련, 경험 및 노동 유동을 통해서 개발된다 (박미희, 여정성, 2000).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행위로 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받는 높은 소득은 인적자본의 생산성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 인식된다 (Schultz, 1961).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임금, 미래 소득,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계는 물질적 자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교육은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되고 교육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습득하게 된 노동자들은 그 대가로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소득을 받게 된다고 봄으로써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간주한다 (정영숙, 1996).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미래의 잠재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이론은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으며, 교육이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부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이 개인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적자본론의 대안적인 이론으로서 선별가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선별가설은 인적자본이론의 교육·생산성·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선별가설에 따르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교육에 의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이 가진 재능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Layard and Psacharopoulos, 1974). 즉 선별가설에서는 대학이 단순히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곳이 아니라 대학 교육이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여과과정 (filtering process) 혹은 분류과정(sorting process)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Lang and David, 1986; Liu and Wong, 1982; Riley, 1979; Stiglitz 1975; Weiss 1995; Wolpin 1977). Arrow(1973)은 선별가설을 주도하였는데 개인의 생산 능력이 완전하게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육 이외에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교육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Layard and Psacharopoulos, 1974). 즉,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을 잘 알고 있는 개인과는 달리 고용주는 그것을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통계적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지표나 신호를 가진 사람이 대개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조건부 기대치를 갖게 되며 이때 주로 학력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정우 1995). 이러한 선별 가설은 교육이 선별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학력 간 소득격차의 상당 부분은 교육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 보다 과대 평가되고, 사람들은 선별가설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채용, 결혼, 지위 상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경제학적 출산 행태 모형에서는 부모를 자녀의 가격과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소비자로 보고 있다.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 함수는 예산제약 하에서의 효용 극대화 과정을 거쳐 도출되며 자녀의 가격

과 가계 소득의 함수로 나타난다. 자녀의 가격 변화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소비자 이론에서의 가격 효과와 대체 효과와 유사하며 가계 소득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도 소득 효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모형 하에서 자녀 수의 수요에 미치는 자녀의 가격 변화는 자녀 양육비의 변화, 자녀 양육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변화(부양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양육비 지원 등) 등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수는 자녀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일반적인 수요 이론을 따른다.

한편,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출산 행태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가설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다양한 출산 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기본적인 모형을 기초로 다양한 출산 행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한 모형들이 뒤따라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 중의 초기 형태로 부모가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해서도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자녀 수와 질의 모델 (quantity and quality model) 이 있다. Becker의 출산 행태를 설명하는 다양한 논문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다. Becker(1960)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자녀가 열등재라거나 자녀에 대한 지출 수준이 높은 고소득의 가정은 높은 자녀 가격에 직면하고 있어 출산률이 낮다는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Becker는 자녀는 정상재라는 전제 하에 자녀에 대한 수요가 자녀의 수로 대변되는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자녀 1인당 지출 비용과 같은 질적인 측면과 관련 있다고 봄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실증 연구 결과들은 앞서 제시한 이론들의 내용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는 보육·교육비 부담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용복과 이소희 (2004)는 오늘날 자녀의 의미가 가계 생산 활동의 계승이라는 투자재의 개념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이라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투자재로서의 자녀를 중시하는 자영업·농가세대가 저하되고 영구 소비재로 자녀를 중시하는 고용자 세대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영구소비재로서의 아동의 경제적인 가치가 오늘날에는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취업률의 상승 등이 영구 소비재로서의 아동 가치의 상승을 가져와 가족은 많은 수의 자녀 보다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택하고 있고 또한 한 자녀에 대한 질을 높이려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 이것이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손승영(2005)은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전통적 요인은 약화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가족에서의 성불평등, 자녀 교육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 사회에 작용하는 경쟁 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사회에서도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심리적 혜택에 변화가 있어와 과거에 비해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는 낮아진 반면 자녀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유교적 규범마저 변화하고 있어 부모의 노후에 대한 자녀의 의무나 물질적 지원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4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훗날 부모에게 제공할 물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4.2%에 이르고 있다 (장혜경 외, 2004).

손승영(2005)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자주 언급된 요인은 경제적 이유이며 특히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고 그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으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녀를 남들과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키우거나 남들보다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사회 압력이 한국 부모들에게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압력이 가계 지출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을 훨씬 높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주(2005)는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과 함께 낱알이 과열되는 교육열에 따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결혼 후 이상적인 수 만큼 자녀를 낳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 요구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 때문이라고 하였다.

차경옥(2004)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만 절감되면 많은 가정에서 자녀 출산에 적극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취업주부들은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 한명에게 과도한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한 명의 자녀에게 과거 2~3명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나 교육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가치가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변화함에 따라 부모들은 양적으로는 적은 수의 자녀와 질적으로는 우수

한 자녀를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질적으로 우수한 자녀를 선호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 비용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녀 질에 대한 투자가 부모들로 하여금 점점 더 높은 액수의 보육·교육 비용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보상 심리, 학벌 주의 등이 자녀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결국 적은 수의 자녀를 선택하고 적은 수의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다시 자녀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순환적인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 3. 연구 방법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 여성 1,500명으로 하였다. 연령대를 25~39세로 한정된 이유는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높은 연령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혼인 상태 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을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연령별·지역별 조사 대상 샘플 수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비율에 따라 할당하였다. 조사 대상 샘플은 전국의 전화번호부 자료를 이용하여 계통추출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절감될 때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여기서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는 자녀의 현재 교육 단계로부터 두 단계 이상의 보육 혹은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았다. 즉,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교육비와 중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만을 대상으로도 수행하여 보육·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출산 의향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도 분석을 수행하여 1자녀에서 2자녀로의 출산 의향과 2자녀에서 3자녀로의 출산 의향에 보육·교육비 절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기술 분석 결과

#### ① 현재 자녀 출산 의향 및 기대 자녀수

전체 응답자의 약 2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소득 계층별로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약간 낮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sup>7)</sup>

자녀 출산 의향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없는 여성 중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녀 1명 있는 경우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약 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비율은 9.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적어도 1명의 자녀는 반드시 낳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2명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여성들이 계획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자녀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sup>7)</sup>	계
전체		363(24.2)	1,137(75.8)	1,500(100)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77(24.1)	243(75.9)	320
	저소득층	57(27.9)	147(72.1)	204
	중산층	87(21.5)	317(78.5)	404
	고소득층	53(22.6)	182(77.4)	235
	최고소득층	79(27.1)	212(72.9)	291

7) 조사 대상 샘플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의 평균은 약 3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중심으로 응답자를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최저소득층 22.0%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14.0% (201만원~290만원이하), 중산층 27.8% (291만원~360만원이하), 고소득층 16.2% (361만원~490만원), 최고소득층 20.0% (491만원이상)으로 나누었다.

〈표 1〉 계속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sup>*)</sup>	계
전체		363(24.2)	1,137(75.8)	1,500(100)
지역	대도시	170(24.9)	512(75.1)	682
	중소도시	170(23.5)	552(76.5)	722
	농촌	23(24.0)	73(76.0)	96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143(24.4)	442(75.6)	585
	비취업중	220(24.0)	695(76.0)	915
어머니 학력	중졸	0( 0)	18(100.0)	18
	고졸	111(20.0)	445(80.0)	556
	대졸	230(26.6)	634(73.4)	864
	대학원졸	22(35.5)	40(64.5)	62
양육 자녀수	없음	93(89.4)	11(10.6)	104
	1명	185(43.5)	240(56.5)	425
	2명	76( 9.2)	748(90.8)	824
	3명 이상	9( 6.1)	138(93.9)	147
어머니 연령	25~29세	144(55.6)	115(44.4)	259
	30~34세	158(27.4)	419(72.6)	577
	35~39세	61( 9.2)	603(90.8)	664

주: “없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임.

현재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 1명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이 전체의 7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명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21.8%, 3명 이상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 자녀 수는 소득 수준, 지역,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대 자녀수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약 40% 정도가 1명의 자녀를, 약 50% 정도가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현재 기대자녀 수(출산 의향 있는 여성)

(단위: 명, %)

구분		자녀수				계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269(74.1)	79(21.8)	13( 3.6)	2(0.6)	363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60(77.9)	14(18.2)	3( 3.9)	-	77
	저소득층	43(75.4)	12(21.1)	2( 3.5)	-	57
	중산층	59(67.8)	22(25.3)	5( 5.7)	1(1.1)	87
	고소득층	36(67.9)	15(28.3)	1( 1.9)	1(1.9)	53
	최고소득층	62(78.5)	15(19.0)	2( 2.5)	-	79
지역	대도시	119(70.0)	44(25.9)	6( 3.5)	1(0.6)	170
	중소도시	132(77.6)	32(18.8)	5( 2.9)	1(0.6)	170
	농촌	18(78.3)	3(13.0)	2( 8.7)	-	23

〈표 2〉 계속

(단위: 명, %)

구분		자녀수				계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269(74.1)	79(21.8)	13( 3.6)	2(0.6)	363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105(73.4)	34(23.8)	3( 2.1)	1(0.7)	143
	비취업중	164(74.5)	45(20.5)	10( 4.5)	1(0.5)	220
어머니 학력	고졸	89(80.2)	15(13.5)	6( 5.4)	1(0.9)	111
	대졸	165(71.7)	57(24.8)	7( 3.0)	1(0.4)	230
	대학원졸	15(68.2)	7(31.8)	-	-	22
양육 자녀수	없음	39(41.9)	48(51.6)	5( 5.4)	1(1.1)	93
	1명	157(84.9)	25(13.5)	3( 1.6)	-	185
	2명	66(86.8)	6( 7.9)	3( 3.9)	1(1.3)	76
	3명 이상	7(77.8)	-	2(22.2)	-	9
어머니 연령	25~29세	93(64.6)	45(31.3)	6( 4.2)	-	144
	30~34세	122(77.2)	28(17.7)	7( 4.4)	1(0.6)	158
	35~39세	54(88.5)	6( 9.8)	-	1(1.6)	61

②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

보육·교육비를 전국 평균 비용보다 높게 지출하는 그룹과 전국 평균 비용보다 낮게 지출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출산 의향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사이에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과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sup>8)</sup>.

〈표 3〉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구분	지출수준	출산 의향			χ <sup>2</sup>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27(23.1)	90(76.9)	117(100)	0.231
	전국평균이상	72(25.4)	212(74.6)	284(100)	
유치원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7(10.8)	58(89.2)	65(100)	0.881
	전국평균이상	49(15.3)	272(84.7)	321(100)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5(9.3)	147(90.7)	162(100)	0.199
	전국평균이상	47(8.2)	529(91.8)	576(100)	
중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2(4.4)	43(95.6)	45(100)	0.006
	전국평균이상	5(4.2)	115(95.8)	120(100)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6.7)	14(93.3)	15(100)	1.000
	전국평균이상	2(6.5)	29(93.5)	31(100)	

주: † p<0.1, \*p<0.05, \*\*<0.01, \*\*\*<0.001

8) 지면상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여성과 2명을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결과표는 기재하지 않았다. 동 결과표는 신윤정 외(20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정도에 관한 연구” 를 참조하기 바란다.

### ③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

출산 의향은 현재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별로도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를 1명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카이스퀘어 검증결과에서도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별로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집단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집단과 비슷한 정도의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역시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여 적은 수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표 4〉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부담수준	출산 의향			x <sup>2</sup>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67( 24.2)	210( 75.8)	277	0.701
	보통이다	24( 27.6)	63( 72.4)	87	
	부담스럽지 않다	8( 21.1)	30( 78.9)	38	
유치원비 지출	부담스럽다	42( 13.5)	268( 86.5)	310	1.390
	보통이다	9( 20.0)	36( 80.0)	45	
	부담스럽지 않다	5( 16.1)	26( 83.9)	31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49( 8.7)	513( 91.3)	562	0.815
	보통이다	11( 8.1)	125( 91.9)	136	
	부담스럽지 않다	2( 4.8)	40( 95.2)	42	
중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7( 5.2)	128( 94.8)	135	1.732
	보통이다	0( 0.0)	26(100.0)	26	
	부담스럽지 않다	0( 0.0)	6(100.0)	6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3( 7.1)	39( 92.9)	42	0.306
	보통이다	0( 0.0)	3(100.0)	3	
	부담스럽지 않다	0( 0.0)	1(100.0)	1	

주: † p<0.1, \*p<0.05, \*\*<0.01, \*\*\*<0.001

### ④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 변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상위 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교육비가 높아지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교육기관에 대해 응답한 사람이 연령이 높고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자녀 출산 의향이 낮기 때

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서의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비용으로 감소하면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희망하는 비용 감소율은 적정비용으로 감소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여성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절감하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약 15~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육비 28%, 유치원비 23.6%, 초등학교 교육비 19.3% 중학교 교육비 17.5%, 고등학교 교육비 23.3%). 이러한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교육비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을 파악한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게 약 50% 절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단위: %, 명,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있다	178( 44.1)	49.1	193,508
	없다	226( 55.9)	43.2	127,415
	계	404(100.0)	46.0	165,697
유치원비	있다	130( 32.7)	50.0	176,691
	없다	267( 67.2)	49.5	168,588
	계	397(100.0)	49.7	171,380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191( 25.8)	49.3	176,276
	없다	549( 74.2)	42.5	160,058
	계	740(100.0)	44.3	164,542
중학교 교육비	있다	33( 19.8)	46.8	257,969
	없다	134( 80.2)	41.1	189,412
	계	167(100.0)	42.3	203,940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11( 23.9)	60.9	316,666
	없다	35( 76.1)	43.3	242,604
	계	46(100.0)	47.5	260,238

〈표 6〉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단위: %, 명,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지출	있다	84( 28.2)	54.9	190,367
	없다	214( 71.8)	43.4	118,287
	계	298(100.0)	47.0	140,021

〈표 6〉 계속

(단위: %, 명,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유치원비 지출	있다	78( 23.6)	178,040
	없다	252( 76.4)	169,735
	계	330(100.0)	171,791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131( 19.3)	183,927
	없다	547( 80.7)	160,431
	계	678(100.0)	165,294
중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28( 17.5)	257,593
	없다	132(82.5)	189,658
	계	160(100.0)	202,396
고등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10( 23.3)	318,519
	없다	33( 76.7)	242,111
	계	43(100.0)	259,744

⑤ 향후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할 때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보육비 지출 여성과 유치원비 지출 여성의 57.4%,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의 51.2%를 보였다. 중학교 교육비와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각각 37.2%와 29.1%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23.9%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람이 응답한 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보다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이 높은 이유는 아직 해당 교육 단계에 대한 지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실제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람보다 적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보육·교육비 감소비율은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 감소율은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자녀를 출산 할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과 여전히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다 낮았다. 이들이 응답한 향후 보육·교육비 희망 감소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여 약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있다	없다	
보육비	있다	272( 57.4)	37.8
	없다	202( 42.6)	35.2
	계	474(100.0)	36.7
유치원비	있다	272( 57.4)	36.5
	없다	202( 42.6)	31.2
	계	474(100.0)	34.2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527( 51.2)	29.4
	없다	503( 48.8)	30.4
	계	1,030(100.0)	29.9
중학교 교육비	있다	438( 37.2)	31.1
	없다	741( 62.8)	32.4
	계	1,179(100.0)	31.9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232( 29.1)	38.5
	없다	566( 70.9)	36.3
	계	798(100.0)	36.9
대학교 교육비	있다	44( 23.9)	40.0
	없다	140( 76.1)	33.5
	계	184(100.0)	35.1

〈표 8〉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단위: 명, %)

구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있다	없다	
보육비 예상 지출	있다	86( 30.8)	38.4
	없다	193( 69.2)	35.4
	계	279(100.0)	36.2
유치원비 예상지출	있다	86( 30.8)	37.0
	없다	193( 69.2)	31.1
	계	279(100.0)	32.7
초등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219( 31.2)	31.2
	없다	484( 68.8)	30.5
	계	703(100.0)	28.7
중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266( 26.7)	31.2
	없다	729( 73.3)	32.5
	계	995(100.0)	27.8
고등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171( 23.3)	38.0
	없다	562( 76.7)	36.3
	계	733(100.0)	25.8
대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39( 22.0)	40.0
	없다	138( 78.0)	33.5
	계	177(100.0)	22.9

## 2) 심층 분석 결과

### ①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첫번째 모형은 현재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출이 현재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우선 보육·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녀 1명 있는 여성과 자녀 2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이유는 1자녀에서 2자녀로, 그리고 2자녀에서 3자녀로의 출산 이행 의사에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또한 보육·교육 단계별로 보육·교육비 지출 정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비를 지출하는 여성, 유치원비를 지출하는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는 여성 각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sup>9)</sup>.

첫 번째 모형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유무, 어머니연령, 어머니학력, 어머니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모형에서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은 지난 3개월간 자녀의 보육 혹은 교육을 위해 지출한 월평균 비용(만원)으로서 가구당 지출한 전체 보육·교육 비용과 자녀 1인당 지출한 비용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여성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두 번째 모형의 주된 분석 목적은 보육·교육비 지출이 감소되면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을 통제하고 지출 감소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비용 변수를 통제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또한 첫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유무, 어머니연령, 어머니학력, 어머니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서

9) 중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 167명 중에서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7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 43명 중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3명으로 6.5%에 지나지 않았다. 샘플수와 자녀 출산 의향 변수의 변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비 지출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기로 한다.

사용하였다. “보육·교육비 지출 감소” 변수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서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수준으로의 감소 비율이다.

세 번째 모형은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는 현재 자녀의 교육단계에서 2단계 높은 교육단계로까지 보았다. 이러한 분석 역시 전체 여성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세 번째 모형의 주된 분석 목적은 향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교육비가 감소되는 경우 여성의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파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유무, 어머니연령, 어머니학력, 어머니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변수는 2007년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서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비용으로의 감소 비율이다.

통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설명은 아래 표와 같다. 통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비선형모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9〉 로짓 모형에 사용한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값
첫번째 모형	종속변수	현재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독립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월평균 보육·교육비 (만원), 연속 변수
두번째 모형	종속변수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 시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독립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절감 비율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 적정 수준) /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100, 연속변수
세번째 모형	종속변수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비용 절감시 자녀출산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독립변수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절감 비율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적정 수준) /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100, 연속변수
공통 독립 변수		소득수준	최저소득층=1 혹은 0 / 저소득층=1 혹은 0 중산층=1 혹은 0 / 고소득층=1 혹은 0 최고소득층=1 혹은 0(준거집단)
		양육자녀수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 연속변수
		남아자녀유무	남아자녀 있음=1, 없음=0
		어머니연령	응답자 여성의 연령, 연속변수
		어머니학력	어머니대졸이상=1 혹은 0 어머니 고졸이상=1 혹은 0(준거집단)
		어머니취업	어머니 취업=1, 어머니 비취업=0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1 혹은 0 중소도시 거주=1 혹은 0 농촌 거주=1 혹은 0(준거집단)	

## ②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추정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번째 모형에서 중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 그리고 세 번째 모형에서 대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이러한 모형들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가) 첫 번째 모형 추정 결과

첫 번째 모형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여성,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모두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중학교 교육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역시 해당 보육·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 지출 변수를 가구당 전체 비용으로 한 경우와 자녀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경우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육비 지출 변수 대신 양육 자녀수와 어머니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들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최소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출산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육·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부모가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출할 교육 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출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결혼 비용 등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자녀를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낳으려는 경향도 보육·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이유라고 판단된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자녀가 2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여성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자녀 출산에서 2자녀 출산으로의 이행 혹은 2자녀에서 3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자녀는 두 명 있어야 한다,” 혹은 “자녀에게 형제 자매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연령인 어린 나이에 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초혼 연령의 상승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다는 사실은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혼 여성의 연령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높은 연령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10〉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전체 여성

구분	가구당 지출	자녀1인당 지출	양육자녀1명	양육자녀2명
가구당 보육·교육비지출	-0.002 (0.003) [0.998]			0.000 (0.004) [1.000]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0.003 (0.003) [0.997]	-0.004 (0.004) [0.996]	
최저소득층	-0.340 (0.264) [0.712]	-0.358 (0.263) [0.699]	-0.563 (0.368) [0.569]	-0.029 (0.411) [0.972]
저소득층	-0.226 (0.279) [0.798]	-0.244 (0.279) [0.783]	-0.116 (0.377) [0.891]	-0.318 (0.465) [0.728]
중산층	-0.326 (0.242) [0.722]	-0.342 (0.243) [0.710]	-0.227 (0.338) [0.797]	-0.513 (0.392) [0.598]
고소득층	-0.657* (0.284) [0.518]	-0.671* (0.284) [0.511]	-0.396 (0.368) [0.673]	-1.034† (0.540) [0.356]
양육자녀수	-1.541*** (0.165) [0.214]	-1.591*** (0.158) [0.204]		
남아자녀있음	-0.099 (0.169) [0.905]	-0.095 (0.169) [0.909]	-0.087 (0.219) [0.916]	-0.101 (0.302) [0.904]
어머니연령	-0.200*** (0.025) [0.818]	-0.199*** (0.025) [0.819]	-0.227*** (0.035) [0.797]	-0.174*** (0.040) [0.840]
어머니대졸이상	-0.082 (0.171) [0.922]	-0.085 (0.171) [0.918]	0.248 (0.246) [1.281]	-0.424 (0.265) [0.655]
어머니취업	-0.116 (0.180) [0.891]	-0.097 (0.181) [0.907]	-0.278 (0.250) [0.757]	-0.061 (0.291) [1.063]
대도시	-0.136 (0.320) [0.873]	-0.132 (0.321) [0.877]	-0.182 (0.436) [0.834]	0.598 (0.654) [1.819]

〈표 10〉 계속

구분	가구당 지출	자녀1인당 지출	양육자녀1명	양육자녀2명
중소도시	0.009 (0.316) [1.009]	0.006 (0.317) [1.006]	-0.291 (0.438) [0.748]	0.888 (0.639) [2.430]
-2 Log L	1,031.264	1,030.631	494.664	451.728
Model chi-square	299.752***	300.385***	70.406***	41.138***
df	12	12	11	11
N	1,349	1,349	412	798

주: 1) † p<0.1, \*p<0.05, \*\*<0.01, \*\*\*<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표 11〉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가구당 보육비지출	0.004 (0.005) [1.004]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0.002 (0.005) [1.002]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4 (0.007) [0.996]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0.005 (0.009) [0.995]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0.007 (0.006) [0.993]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0.006 (0.008) [0.994]
최저소득층	-0.243 (0.487) [0.784]	-0.299 (0.484) [0.741]	-1.576** (0.551) [0.207]	-1.577** (0.550) [0.207]	0.247 (0.466) [1.280]	0.296 (0.470) [1.344]
저소득층	-0.439 (0.506) [0.645]	-0.481 (0.502) [0.618]	-1.042† (0.605) [0.353]	-1.047† (0.606) [0.351]	-0.164 (0.540) [0.849]	-0.135 (0.543) [0.874]
중산층	-0.294 (0.432) [0.745]	-0.341 (0.432) [0.711]	-1.222** (0.461) [0.295]	-1.227** (0.462) [0.293]	-0.249 (0.438) [0.779]	-0.229 (0.439) [0.795]
고소득층	-0.349 (0.475) [0.706]	-0.374 (0.475) [0.688]	-2.563** (0.841) [0.077]	-2.558** (0.840) [0.077]	-0.797 (0.565) [0.451]	-0.784 (0.564) [0.456]
양육자녀수	-1.884*** (0.297) [0.152]	-1.872*** (0.301) [0.154]	-1.378*** (0.342) [0.252]	-1.403*** (0.343) [0.246]	-0.850** (0.278) [0.427]	-0.904** (0.286) [0.405]

〈표 11〉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남아자녀있음	-0.127 (0.302) [0.881]	-0.129 (0.302) [0.879]	0.035 (0.373) [1.035]	0.045 (0.373) [1.046]	-0.357 (0.322) [0.700]	-0.357 (0.321) [0.700]
어머니연령	-0.163** (0.048) [0.850]	-0.166** (0.048) [0.847]	-0.198** (0.059) [0.820]	-0.195** (0.059) [0.823]	-0.200*** (0.054) [0.819]	-0.203*** (0.054) [0.816]
어머니대졸이상	0.010 (0.328) [1.010]	0.011 (0.328) [1.012]	-1.051** (0.369) [0.350]	-1.048** (0.369) [0.351]	-0.010 (0.311) [0.990]	-0.002 (0.312) [0.998]
어머니취업	-0.383 (0.317) [0.682]	-0.346 (0.315) [0.708]	0.107 (0.376) [1.113]	0.103 (0.376) [1.109]	0.110 (0.305) [1.116]	0.094 (0.305) [1.099]
대도시	0.727 (0.646) [2.070]	0.748 (0.644) [2.112]	-0.776 (0.678) [0.460]	-0.774 (0.678) [0.461]	-0.508 (0.564) [0.602]	-0.522 (0.565) [0.593]
중소도시	0.862 (0.641) [2.368]	0.862 (0.639) [2.369]	-0.433 (0.657) [0.648]	-0.434 (0.657) [0.648]	-0.092 (0.537) [0.912]	-0.096 (0.538) [0.908]
-2 Log L	336.368	336.991	242.907	242.873	357.955	358.595
Model chi-square	102.188***	101.564***	59.293***	59.326***	43.732***	42.750***
df	12	12	12	12	12	12
N	388	388	376	376	710	708

주: 1) † p<0.1, \*p<0.05, \*\*<0.01, \*\*\*<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 나) 두 번째 모형 추정 결과

두 번째 모형 추정 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서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지출감소	0.012** (0.005) [1.012]				
가구당 보육비 지출	0.009 (0.006) [1.009]				
유치원비 지출감소		0.002 (0.005) [1.002]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5 (0.006) [0.995]			
초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11** (0.004) [1.011]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0.012** (0.004) [0.988]		
중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02 (0.010) [1.002]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지출				0.016† (0.008) [1.016]	
고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59† (0.032) [1.061]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지출					0.010 (0.028) [1.010]
최저소득층	0.158 (0.484) [1.171]	-0.880 (0.421) [0.415]	0.181** (0.338) [1.198]	1.370 (0.851) [3.936]	-1.391 (2.023) [0.249]
저소득층	0.532 (0.498) [1.702]	-0.527 (0.471) [0.591]	-0.210 (0.375) [0.811]	0.229 (1.097) [1.258]	-1.799 (2.262) [0.165]
중산층	0.389 (0.429) [1.476]	-0.485 (0.357) [0.616]	-0.151 (0.290) [0.860]	1.112 (0.801) [3.040]	0.940 (1.853) [2.560]
고소득층	0.231 (0.465) [1.260]	-1.253† (0.463) [0.286]	-0.395** (0.339) [0.674]	0.395 (0.812) [1.484]	0.251 (1.771) [1.285]
양육자녀수	-1.668*** (0.279) [0.189]	-1.246*** (0.267) [0.288]	-0.689*** (0.189) [0.502]	-0.388 (0.375) [0.678]	-2.124 (1.308) [0.119]
남아자녀 있음	0.149 (0.300) [1.161]	-0.353 (0.279) [0.702]	-0.302 (0.237) [0.739]	0.719 (0.684) [2.053]	-0.701 (2.053) [0.496]



〈표 12〉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어머니연령	-0.110* (0.043) [0.895]	-0.086 (0.044) [0.917]	-0.158* (0.039) [0.854]	0.099 (0.167) [1.104]	-0.026 (0.713) [0.975]
어머니 대졸이상	-0.437 (0.297) [0.646]	-0.526 (0.272) [0.591]	-0.193† (0.210) [0.824]	-0.341 (0.540) [0.711]	-1.194 (1.723) [0.303]
어머니 취업	0.325 (0.282) [1.384]	0.200 (0.288) [1.222]	-0.100 (0.206) [0.904]	-0.390 (0.459) [0.677]	2.450 (1.923) [11.592]
대도시	0.334 (0.533) [1.397]	0.229 (0.566) [1.257]	0.199 (0.408) [1.221]	-0.036 (0.487) [0.964]	-0.858 (1.278) [0.424]
중소도시	0.538 (0.519) [1.712]	0.286 (0.562) [1.331]	0.093 (0.400) [1.097]		
-2 Log L	361.769	387.766	639.704	138.624	28.755
Model chi-square	86.946***	55.069***	71.892***	13.295	16.799
df	13	13	13	12	12
N	324	343	606	148	41

주: 1) † p<0.1, \*p<0.05, \*\*<0.01, \*\*\*<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표 13〉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지출감소	0.018** (0.006) [1.018]				
가구당 보육비 지출	0.011 (0.007) [1.011]				
유치원비 지출감소		0.002 (0.006) [1.002]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8 (0.007) [0.992]			
초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13** (0.005) [1.013]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0.012** (0.005) [0.988]		
중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03 (0.010) [1.003]	

〈표 13〉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지출				0.013 (0.009) [1.013]	
고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161† (0.088) [1.175]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지출					0.036 (0.050) [1.037]
최저소득층	0.499 (0.624) [1.647]	-0.604 (0.500) [0.546]	0.115 (0.393) [1.122]	0.698 (0.901) [2.010]	-6.183 (4.221) [0.002]
저소득층	0.987 (0.636) [2.684]	-0.400 (0.566) [0.670]	-0.313 (0.445) [0.731]	-0.161 (1.122) [0.851]	-5.890 (4.442) [0.003]
중산층	0.917 (0.562) [2.503]	-0.299 (0.430) [0.741]	-0.029 (0.333) [0.972]	0.558 (0.852) [1.748]	-2.072 (3.003) [0.126]
고소득층	0.749 (0.607) [2.114]	-0.724 (0.509) [0.485]	-0.210 (0.379) [0.810]	0.265 (0.822) [1.303]	-0.959 (2.856) [0.383]
양육자녀수	-0.964** (0.003) [0.381]	-1.413*** (0.341) [0.243]	-0.614** (0.214) [0.541]	-0.505 (0.409) [0.604]	-4.230† (2.451) [0.015]
남아자녀있음	0.328 (0.369) [1.388]	-0.161 (0.330) [0.851]	-0.157 (0.276) [0.855]	0.497 (0.696) [1.643]	-5.935 (4.201) [0.003]
어머니연령	-0.030 (0.052) [0.970]	-0.061 (0.051) [0.941]	-0.138** (0.046) [0.872]	0.046 (0.175) [1.047]	-0.746 (0.974) [0.474]
어머니대졸이상	-0.310 (0.336) [0.733]	-0.360 (0.315) [0.697]	-0.238† (0.238) [0.788]	-0.631 (0.607) [0.532]	-3.141 (3.719) [0.043]
어머니 취업	0.496 (0.324) [1.641]	0.303 (0.331) [1.361]	-0.137 (0.236) [0.872]	-0.737 (0.514) [0.479]	8.893† (4.853) [7283.251]
대도시	-0.025 (0.598) [0.975]	0.652 (0.707) [1.919]	0.533 (0.500) [1.704]	-0.039 (0.523) [0.961]	-2.535 (2.493) [0.079]
중소도시	0.280 (0.580) [1.323]	0.581 (0.708) [1.788]	0.237 (0.495) [1.267]		
-2 Log L	263.187	301.064	512.280	123.416	19.060
Model chi-square	34.934**	32.844**	46.838***	11.379	22.544*
df	13	13	13	12	12
N	240	294	551	141	38

주: 1) † p<0.1, \*p<0.05, \*\*<0.01, \*\*\*<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 다) 세번째 모형 추정 결과

향후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여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출할 보육비와 유치원비의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출할 비용의 절감이 자녀를 출산 하도록 의향을 변경시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의 절감이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의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향후 보육료나 유치원비 지출에 대한 절감은 자녀 출산 의향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나, 이 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 비용의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모형에서 독립 변수인 예상지출감소는 전국 평균 비용으로부터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비용으로의 절감이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제로 지출할 비용이 전국의 평균 비용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국 평균 비용으로 부터의 절감은 여성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절감 수준일 수 있다. 이렇게 현실감이 부족한 비용의 절감은 자녀를 출산 하도록 의향을 갖도록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으로의 비용 절감이야 여성들이 출산 의향을 갖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14〉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예상지출감소	0.008* (0.004) [1.008]					
유치원비 예상지출감소		0.008* (0.004) [1.008]				
초등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1 (0.003) [1.001]			

〈표 14〉 계속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에상지출감소				-0.000 (0.002) [1.000]		
고등학교 교육비에상지출감소					0.003 (0.003) [1.003]	
대학교 교육비에상지출감소						0.015 <sup>†</sup> (0.009) [1.015]
최저소득층	0.113 (0.389) [1.120]	0.068 (0.392) [1.070]	-0.049 (0.251) [0.953]	-0.067 (0.228) [0.935]	-0.063 (0.278) [0.939]	0.116 (0.655) [1.124]
저소득층	-0.267 (0.419) [0.765]	-0.307 (0.420) [0.736]	-0.222 (0.267) [0.801]	-0.174 (0.245) [0.841]	-0.125 (0.309) [0.882]	-0.339 (0.785) [0.712]
중산층	-0.055 (0.384) [0.946]	-0.077 (0.386) [0.926]	-0.307 (0.229) [0.736]	-0.305 (0.201) [0.737]	-0.307 (0.246) [0.736]	-0.002 (0.594) [0.998]
고소득층	-0.336 (0.423) [0.714]	-0.344 (0.422) [0.709]	-0.305 (0.258) [0.737]	-0.392 <sup>†</sup> (0.230) [0.676]	-0.426 (0.282) [0.653]	0.294 (0.606) [1.342]
양육자녀수	-1.408*** (0.187) [0.245]	-1.410*** (0.188) [0.244]	-1.252*** (0.129) [0.286]	-0.982*** (0.129) [0.375]	-0.570*** (0.156) [0.565]	-0.505 <sup>†</sup> (0.300) [0.604]
남아자녀있음	-0.415 (0.254) [0.660]	-0.372 (0.255) [0.689]	-0.262 (0.165) [0.770]	-0.278 <sup>†</sup> (0.155) [0.758]	-0.331 <sup>†</sup> (0.201) [0.718]	0.730 (0.555) [2.075]
어머니연령	-0.033 (0.038) [0.967]	-0.032 (0.038) [0.968]	-0.081** (0.024) [0.922]	-0.136*** (0.022) [0.873]	-0.138*** (0.033) [0.871]	0.072 (0.148) [1.075]
어머니대졸이상	-0.234 (0.260) [0.791]	-0.296 (0.260) [0.744]	-0.274 <sup>†</sup> (0.165) [0.760]	-0.184 (0.145) [0.832]	-0.240 (0.181) [0.787]	-0.415 (0.449) [0.660]
어머니 취업	-0.213 (0.332) [0.808]	-0.243 (0.333) [0.784]	0.111 (0.167) [1.118]	0.082 (0.145) [1.085]	-0.113 (0.176) [0.893]	-0.548 (0.405) [0.578]
대도시	-0.070 (0.477) [0.933]	0.004 (0.480) [1.004]	0.067 (0.307) [1.069]	0.249 (0.286) [1.283]	0.475 (0.378) [1.609]	1.109 (1.116) [3.031]
중소도시	0.079 (0.475) [1.082]	0.162 <sup>†</sup> (0.478) [1.176]	0.164 (0.304) [1.178]	0.293 (0.283) [1.341]	0.451 (0.373) [1.570]	1.497 (1.096) [4.470]
-2 Log L	478.354	478.043	1,115.055	1,305.918	852.083	177.313
Model chi-square	144.784***	145.095***	247.883***	162.684***	54.886***	14.460
df	12	12	12	12	12	12
N	456	456	984	1,107	749	173

주: 1) <sup>†</sup> p<0.1, \* p<0.05, \*\* p<0.01, \*\*\* p<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표 15〉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예상지출감소	0.004 (0.005) [1.004]					
유치원비 예상지출감소		0.007 (0.005) [1.007]				
초등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1 (0.003) [1.001]			
중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1 (0.003) [0.999]		
고등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03 (0.004) [1.003]	
대학교 교육비예상지출감소						0.016† (0.009) [1.016]
최저소득층	0.054 (0.459) [1.056]	-0.045 (0.463) [0.956]	0.132 (0.292) [1.141]	-0.040 (0.259) [0.960]	-0.215 (0.310) [0.806]	-0.413 (0.701) [0.662]
저소득층	-0.567 (0.524) [0.567]	-0.668 (0.529) [0.513]	-0.176 (0.322) [0.838]	-0.209 (0.283) [0.812]	-0.152 (0.337) [0.859]	-0.581 (0.798) [0.559]
중산층	-0.173 (0.453) [0.842]	-0.248 (0.456) [0.781]	-0.204 (0.272) [0.815]	-0.250 (0.231) [0.779]	-0.338 (0.270) [0.713]	-0.473 (0.634) [0.623]
고소득층	-0.647 (0.545) [0.524]	-0.832 (0.564) [0.435]	-0.197 (0.310) [0.821]	-0.234 (0.259) [0.792]	-0.331 (0.301) [0.719]	0.221 (0.614) [1.247]
양육자녀수	-0.534* (0.289) [0.586]	-0.536* (0.240) [0.282]	-0.680*** (0.154) [0.507]	-0.685*** (0.146) [0.504]	-0.448* (0.169) [0.639]	-0.561† (0.317) [0.571]
남아자녀있음	-0.359 (0.316) [0.698]	-0.283 (0.321) [0.754]	-0.228 (0.197) [0.796]	-0.249 (0.178) [0.779]	-0.235 (0.223) [0.790]	0.529 (0.567) [1.698]
어머니연령	-0.009 (0.045) [0.991]	-0.007 (0.046) [0.993]	-0.034 (0.028) [0.966]	-0.100*** (0.025) [0.904]	-0.118* (0.037) [0.888]	0.030 (0.154) [1.031]
어머니대졸이상	0.051 (0.320) [1.052]	-0.030 (0.322) [1.030]	-0.149 (0.194) [0.861]	-0.214 (0.164) [0.808]	-0.311 (0.198) [0.732]	-0.657 (0.495) [0.519]
어머니 취업	-0.432 (0.428) [0.649]	-0.541 (0.436) [0.582]	0.107 (0.195) [1.113]	0.076 (0.164) [1.079]	-0.107 (0.194) [0.899]	-0.839† (0.442) [0.432]
대도시	0.942 (0.812) [2.566]	1.028 (0.821) [2.795]	0.311 (0.383) [1.365]	0.474 (0.345) [1.606]	0.890† (0.470) [2.435]	0.862 (1.123) [2.369]
중소도시	1.348† (0.807) [3.849]	1.464† (0.814) [4.324]	0.505 (0.379) [1.658]	0.497 (0.342) [1.644]	0.749 (0.466) [2.115]	1.293 (1.104) [3.644]
-2 Log L	313.202	309.024	796.264	1,034.790	727.109	160.299
Model chi-square	19.983†	21.795*	42.382***	59.027***	31.995*	15.841
df	12	12	12	12	12	12
N	270	269	671	932	690	166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높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계층은 거의 대부분이 전국 평균 수준의 보육·교육비 수준에 대해서도 비용 지출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 보육·교육비 부담에 대한 계층간 차별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각 가정의 보육·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경우 여성들의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욱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육비 절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만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교육비까지 고려한다. 또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만을 가지고서는 여성들의 자녀 출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자녀를 반드시 하나쯤은 낳아야 한다”는 사고도 자녀 보육·교육 비용이 출산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갖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과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낳으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개별 가정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자녀를 낳되 한 명만 낳게 되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육비 절감이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육·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례로 전국 평균 비용 수준에서의 보육·교육비

절감은 출산 의향에 그다지 큰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부모들이 전국 평균 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절감은 많은 부모들에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출산 의향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육료 절감의 효과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계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출산력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정책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혹은 여성의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클 것으로 나타나 가임기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영주,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2호, 2005.
- 박미희·여정성,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2000.
- 손승영,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제17권 제2호, 285-316, 2005.
- 신윤정, 성태운, 최은영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용복·이소희,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제2호, 95-113, 2004.
- 이정우, 「교육과 소득분배」, 서울 비봉출판사, 1995.
- 장혜경·이미정·김경미·김영란,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연구보고서 240-15, 한국여성개발원, 2004.
- 정영숙,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1-13, 1996
- 차경욱, 「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3, No.2, 2005.
- Becker, G,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Series 11 (NBER, Princeton, NJ), 209-231, 1960.
- Lang, K. & David, K, Human capital vs. sorting. The effect of compulsory attendance law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August), 609-624, 1986.
- Layard, R. & Psacharopoulos, G, The screening hypothesis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5), 958-998, 1974.
- Liu, Pal-Wai & Wong, Yue-chim, Educational screening by certificates : An empirical test, *Economic Inquiry*, 20(January), 72-83, 1982.
- Riley, J. G,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n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2), S227-252, 1979.
- Schultz, T. W.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 1961.
- Stiglitz, J.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3), 283-300, 1975.
- Weiss, A, Human capital vs. signaling explanations of wages.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9(4), 133-154, 1995.
- Wolpin, K. I, Education and screening. *American Economic Review*, 67(5), 949-958, 1977.



## 발표 3

# 결혼지연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교수]



##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조희금(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고선강(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교수)

어성연(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I. 서론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낮은 출산율은 미래의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저출산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연구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저출산과 관련이 깊은 사회현상 중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만혼과 혼인 기피 현상이다. 우리사회는 법적 혼인이 아닌 남녀의 동거에 의한 출산이나 혼외 출산 등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삼식 외(2005)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20세-44세의 미혼남녀의 약 79%가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에서도 혼인을 통한 출산이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는 결혼에 의한 출산의 기회를 줄이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결혼지연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초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4.8세, 1997년 25.7세, 2007년 28.1세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 또한 1990년 27.8세, 1997년 28.6세, 2007년 31.1세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초혼연령 상승의 추세는 여성의 연령대 별 출산율의 변화 양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즉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이 20대 여성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두섭 외, 2007). 김두섭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기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23.6세였고, 1997년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6.2세였다.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취업난으로 인한 학습기간 연장 및 경제적 독립 시기 연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만혼 및 결혼기피의

사유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 미혼 남녀의 결혼관, 결혼의사 등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의 동향조사(예,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이루어졌으나, 결혼 적령기에 속한 코호트의 세부적인 대상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관 변화, 결혼관과 혼인실행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미미하다.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의 결혼지연 및 기피 요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부 대상 집단의 결혼지연 및 기피요인에 따른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대상 집단의 결혼지연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집행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결혼 지연 취약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 집중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가임기 여성의 결혼지연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남성과 여성의 결혼지연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결혼에 관한 것 보다는 ‘출산’ 장려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합법적 혼인을 통한 출산이 보편적으로 장려되므로, 출산의 전 단계인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출산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은 대부분 결혼 결정 이후의 단기적 지원(예, 신혼부부 주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혼 남녀의 결혼 결정을 독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가족의 형성과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지연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결혼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혼적령기 코호트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이성교제과정,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 사회적 장애/조성 요인을 발견하고, 세분화된 정책대상 그룹별 결혼관련 정책 인지도 및 요구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결혼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여러 통계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해 알려졌다. 2003 전국가족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미혼남녀 중 남성 28%, 여성 29.6%가 결혼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은 경제적 기반부족과 일에 열중하기 위한 이유를, 여성은 일에 대한 열중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임을 주요이유로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남성의 71.4%만이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두섭 외(2007)은 통계청의 1998년, 2006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결혼의 필수성 보다는 선택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의 개인적 선택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남녀차이가 있으며, 결혼의향과 결혼시기의 결정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미혼자 자료를 분석한 김정석(2006)은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있어서 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여러 관련 변인을 통제된 후에도 성은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과 비교해서 남성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결혼의 혜택(benefit)과 비용(cost)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로 설명하며, 남성은 결혼으로부터의 혜택을 여성은 결혼으로부터 비용을 더 인지한다고 해석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에서 여성의 경우 연령과 결혼의향의 관계가 남성의 경우보다 뚜렷이 나타나 결혼연령에 대한 규범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보다는 독립가구 거주여부,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여성들이 결혼과 취업을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미혼여성들에게 취업여부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이수진(2006)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차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석(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학력과 취업여부는 남성에게만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남녀 모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았지만 여성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혼전의 생애과정이 결혼 시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은기수(1999) 연구에서도 결혼 전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양상은 남성과 여성에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먼 과거의 생애과정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가까운 과거의 생애과정만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사회에서 일반적이라 여기는 생애과정을 거친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자는 남성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생애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규범이 중요한 반면, 여성은 생애과정에 대한 규범보다는 결혼적령기라는 연령규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남녀의 결혼시기 지연의 원인을 분석한 박경숙 외(2005)의 연구도 남녀의 결혼시기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1990년 이후 결혼한 남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고, 취업여부도 결혼시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결혼기회가 교육수준과 취업 상황에 따라 계층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1990년~1997년 결혼한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으나 1998년 이후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확보의 기능이 축소된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유보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김정석(2006), 이수진(2006)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박경숙 외(2005)의 연구는 취업이 여성의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여성의 경우 비취업자와 비교하여 취업자의 초혼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고학력 남성이 갖는 고학력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고용시장의 불안과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의 약화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 강화와 결혼시기 지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를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그간의 출산지원정책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조병구 등(2007)은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결과에서, 출산율 저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지연 및 단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1993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결혼감소 요인의 분석결과 여성의 고학력화와 임금을 상승이 결혼을 미루거나 단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에 교육비로 인한 자녀비용의 상승, 주거비용으로 인한 가정의 공공재 가격 상승 등이 결혼이 주는 매력을 감소시켜 결혼지연 및 단념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혼의향, 결혼시기 등에 관한 최근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성은 결혼의향, 결혼시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남녀의 결혼의향,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과 취업이 여성의 결혼의향 및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특히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시기 및 장애요인들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및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 주요 결혼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남녀로 제한하였다. 연구 대상을 제한한 근거는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혼인 희망연령이 미혼 남성은 30대 초(31.8세), 여성은 30세 전후(29.7세)가 혼인희망연령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한 2007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1세로 여성 28.1세로 나타나 평균초혼 연령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미혼 남녀를 결혼지연에 관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동년배 cohort 중 기혼자들을 배경집단으로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주된 연구대상은 28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남녀이고, 배경집단으로서의 연구대상은 28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성인자녀를 가진 부모 및 기혼자로 정의 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통합적 방법론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과 함께 양적연구의 패러다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Johnson & Christensen, 2004).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혼지연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자료 수집

##### 1-1) 대표표집 조사 자료의 활용

편의 표집에 의한 양적 사회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신뢰도가 높고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 대표표집 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판단 하에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의 미혼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자료는 결혼의 필요성, 이상적인 혼인연령, 결혼계획, 결혼 장애 요인, 결혼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20세-45세의 미혼, 기혼 남녀에게 조사한 자료이다.

##### 1-2) 면접 자료의 수집

현상학적 집단 심층 면접(Phenomenological Focus Groups) 분석은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그 배경지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개인/집단의 가치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심층적 기술을 함으로써 현재의 정책에 관한 평가를 제공하고자 정책 입안자들의 향후 정책 진행 방향을 제시한다. 세부 집단을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유용한 방법으로 외국의 경우 정책 분석 연구에 빈번히 사용된다. 하나의 Focus Group (이하 FG)는 넷에서 열명까지의 인원이 참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개인들을 모으는 것이 원활한 토론을 도모하고 논의 중 파벌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uh, 2006). 따라서 동질성을 띠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집단을 모집하는 것이 성공적인 FG의 조건이 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정책 대상군은 2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남녀이고, 이들은 성별과 취업력에 의한 두 개의 하부 집단으로 분리 되어 조사되었다. 총 10개 집단을 대상으로 FG 면접이 실시되었다. 비교집단으로 동 연령 Cohort에 속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G 면접을 한 집단 추가로 진행하였다. 모집단의 수가 적어서 리크루트에 어려움을 겪었던 생산직 미혼 여성집단이 생산직 기혼집단으로 대체되어 진행되었다. 총 10 세션의 FG에 36명의 미혼남녀와 15명의 기혼남녀가 참가하였다.

FG는 한명의 moderator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의 허락하에 FG내용은 녹음 되었고 현장에서 연구보조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후 녹취된 음성화일은 전사자에 의해서 전사 작업이 진행되었다. 10 FG의 실시결과 총 3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전사 자료와 현장/추후 기록이 자료 분석을 위한 기록 자료로 창출되었다. 녹음된 음성화일의 반복된 청취와 기록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FG 인터뷰 결과를 개방코딩, 축코딩, 연합과 비교를 통한 주제 도출의 단계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혼인적령기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태도: 전반적 경향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 중 미혼자 자료의 연구대상 연령(28세-40세)에 있는 미혼 남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김정석, 2006 등)에서 논의 되었던, 성과 취업상황은 결혼의향, 결혼계획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들은 취업이 남성의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준대거나(김정석,



2006; 이수진, 2006) 여성의 초혼시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박경숙 외, 2005)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성과 취업을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결혼계획에 주요한 영향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을 취업 유무로 나누고, 취업집단은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으로 구분하였다. 취업과 직종으로 분류된 5개 집단 안에서 결혼의향 등에 대한 성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sup>10)</sup> 분석대상은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미혼자 자료 중 본 연구의 대상연령인 28-40세 사이로 한정하였다. 직군별 분석대상 표본의 수, 직군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직군별 분석대상 표본 수 및 직군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sup>11)</sup>	무직	
남자	557	185	86	164	120	
여자	257	141	49	11	56	
계	814	326	135	175	176	
연령(세)	31.69	31.17	31.80	32.69	31.57	
소득(만원)	164.37	182.76	158.46	153.05	140.20	
교육수준(%)	중졸	30( 3.69)	1( 0.31)	6( 4.44)	13( 7.43)	10( 5.71)
	고졸	326(40.10)	55(16.87)	73(54.07)	123(70.29)	74(42.29)
	초대졸	133(16.36)	66(20.25)	15(11.11)	24(13.71)	27(15.43)
	대졸이상	324(39.85)	204(62.58)	41(30.37)	15(8.57)	64(36.57)

### 1)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의향, 결혼계획 연령

미혼 남녀의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은 각 직군별 남녀를 비교한 결과 모든 직군에서 남성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비율이 높았다. 다른 직군과 비교해서 판매·서비스직의 남녀차가 크게 나타났고, 무직의 남녀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미혼 남녀의 본인의 결혼의향은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에서 남녀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 직군에서는 남성들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았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결혼은 여성들에게 혜택보다는 비용의 측면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여성들이 자신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동

10) 교육수준도 결혼의향과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나 연구결과 도출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직종에 의한 연구대상 세분화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1)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하여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층화표집하였기 때문에 직군별 빈도의 비율이 전체 미혼남녀의 직군별 비율과 유사할 것이라 생각하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8세-40세 사이의 미혼남녀의 직종분포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연령대의 미혼여성의 생산직 종사 비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일직중에 종사하는 남성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28세-40세의 미혼여성의 대다수가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부정적 결혼의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혼여성의 결혼지연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일직종의 경향을 고려할 때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여성들과 남성들의 결혼의향의 뚜렷한 차이는 동일 직종의 남성들의 결혼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여성들의 부정적 결혼의향의 이유에 대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표 2〉 28~40세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

구분		남자 빈도(%)	여자 빈도(%)	합계 빈도(%)	X <sup>2</sup>	
전문 사무직	결혼에 대한 생각	해야 좋다 <sup>1)</sup>	132(72.53)	57(41.61)	189(59.25)	30.95***
		하지 않아도 좋다 <sup>2)</sup>	50(27.47)	80(58.39)	130(40.75)	
	결혼 의향	결혼생각 있다	161(87.03)	99(70.21)	260(79.75)	14.01***
		결혼생각 없다	24(12.97)	42(29.79)	66(20.25)	
판매서 비스직	결혼에 대한 생각	해야 좋다 <sup>1)</sup>	59(71.95)	15(33.33)	74(58.27)	17.82***
		하지 않아도 좋다 <sup>2)</sup>	23(28.05)	30(66.67)	53(41.73)	
	결혼 의향	결혼생각 있다	67(77.91)	30(61.22)	97(71.85)	4.30*
		결혼생각 없다	19(22.09)	19(38.78)	38(28.15)	
생산 노무직	결혼에 대한 생각	해야 좋다 <sup>1)</sup>	107(67.72)	3(27.27)	110(65.09)	7.40**
		하지 않아도 좋다 <sup>2)</sup>	51(32.28)	8(72.73)	59(34.91)	
	결혼 의향	결혼생각 있다	121(73.78)	6(54.55)	127(72.57)	1.92
		결혼생각 없다	43(26.22)	5(45.45)	48(27.43)	
무직	결혼에 대한 생각	해야 좋다 <sup>1)</sup>	64(55.17)	22(40.74)	86(50.59)	3.07
		하지 않아도 좋다 <sup>2)</sup>	52(44.83)	32(59.26)	84(49.41)	
	결혼 의향	결혼생각 있다	83(69.17)	34(60.71)	117(66.48)	1.22
		결혼생각 없다	37(30.83)	22(39.29)	59(33.52)	

주: 1) '해야 좋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를 합친 것임

2) '하지 않아도 좋다'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데 낫다'를 합친 것임

남녀의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은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무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남녀의 차이를 나타냈다. 전문·사무직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남성의 결혼적령기,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사무직 남성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평균 27.7세로 나타난 반면, 전문·사무직 여성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29.3세로 나타났다. 전문·사무직 남성들이 기대하는 여성의 적절한 결혼연령이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결혼연령보다 약 1.6세 낮게 나타났다. 본인의 결혼 계획 연령은 남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성 여성 모두 평균 33.3세 32.7세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결혼 적정 연령이 여성 스스로 생각하는 결혼 적정연령보다 낮은 반면 여성과 남성의 결혼 계획

연령이 비슷한 것은 남녀의 결혼 연령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전문·사무직에서 나타났던 여성의 결혼적령기에 대한 남녀의 시각 차이는 판매·서비스직에서도 나타났다. 판매·서비스직 미혼남성은 일반적인 여성의 결혼적령기를 27.5세로 보는 반면, 판매·서비스직 여성은 일반적인 여성의 결혼적령기를 29.2세로 약 1.7세 더 높게 보고 있었다. 사전 분석결과 판매·서비스직 남성의 평균 연령이 31.8세이고, 판매·서비스직 여성의 평균연령이 31.9세로 두 집단간의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계획 연령은 남성이 34.1세 여성이 32.6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사무직 미혼 남녀의 결혼계획 연령의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표 3〉 28~40세 미혼 남녀의 결혼적령기, 결혼계획연령

구분		남자		여자		t값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전문사무직	남자결혼적령기	185	31.04	140	31.77	- 2.84**
	여자결혼적령기	185	27.68	140	29.26	- 6.71***
	결혼계획연령	159	33.27	92	32.79	1.42
판매서비스직	남자결혼적령기	86	30.79	47	31.79	- 2.30*
	여자결혼적령기	86	27.54	47	29.15	- 4.55***
	결혼계획연령	67	34.10	28	32.57	2.92**
생산노무직	남자결혼적령기	161	30.48	11	29.91	0.70
	여자결혼적령기	161	27.32	11	28.46	- 1.57
	결혼계획연령	107	34.21	6	32.00	1.64
무직	남자결혼적령기	119	30.83	55	31.73	- 2.64**
	여자결혼적령기	119	27.61	55	29.11	- 3.97***
	결혼계획연령	82	34.54	31	32.32	3.46***

## 2) 결혼하지 않은 이유

전문·사무직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최다 빈도를 나타냈다. 남성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상위 순위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결혼보다 자신의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결혼생활과 직장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등 일과 관련된 이유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사무직 남성은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과 결혼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전문·사무직 여성은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 4〉 전문·사무직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남성			
순위	1순위(빈도)	순위	2순위(빈도)
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37)	1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21)
2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4)	2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16)
	결혼비용(혼수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24)	3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5)
3	소득이 적어서(14)	4	결혼비용(혼수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13)
4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13)	5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1)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3)	6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10)
5	시간이 없어서(12)	7	소득이 적어서(9)
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0)		시간이 없어서(9)
7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9)	8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8)
8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8)	9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6)

여성			
순위	1순위(빈도)	순위	2순위(빈도)
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41)	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5)
2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8)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5)
3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2)	2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11)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2)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11)
4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8)	3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1)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8)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0)
5	시간이 없어서(6)	4	결혼제도가 남편집안 중심이기 때문에(7)
6	결혼비용(혼수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5)	5	소득이 적어서(5)
7	소득이 적어서(4)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5)
	아직 결혼을 하기에 이른 나이가므로(4)		시간이 없어서(5)

전문·사무직 미혼 남성들은 결혼을 위한 물리적, 경제적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혼을 지연하고 있는 반면, 전문·사무직 미혼 여성들은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만나는 기회의 부족), 결혼과 자신의 일 사이의 경쟁관계로 인해 결혼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전문·사무직 미혼 남성들은 같은 직군의 여성들에 비해 적절한 배우자감을 만날 기회가 더 많고,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 반면, 전문·사무직 미혼 여성들은 ‘적절한’ 배우자감을 만나기가 어렵고, 자신의 일과 결혼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판매·서비스직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소득, 결혼비용 부족이다. 그 뒤를 이어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도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 가치관,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결혼준비를 위한 비용의 측면과 현재 소득의 부족을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생각하는 반면, 판매·서비스직 여성은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것, 결혼 적령기를 놓친 것,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은 것,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생산·노무직 남성의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소득이 적다는 것이(42명) 1순위로 최다 빈도를 나타냈으며,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점이 2순위 최다빈도를 나타냈다. 다른 직군의 남성들과 달리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결혼 적령기 제약의 빈도수가 상위에 들어가는 점이 특이하다.

무직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실업상태, 소득 부족, 고용 불안정이었으며,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결혼적령기를 놓쳤거나 이성교제 기회부족이었다. 무직 여성의 경우 적절한 배우자감 부재, 실업상태, 건강문제, 이성교제 기회부족이었다. 무직 남성의 경우 고용과 소득에 대한 압박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주요한 이유들인 반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적절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한 것, 결혼적령기 규범, 결혼이 주는 구속감 등을 주요한 결혼기피 또는 지연의 이유로 표현하였다.

종합적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와 적절한 만남의 기회 부족을 여성들은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주된 이유라고 답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사무직 남성은 경제적인 이유 보다 적절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한 것, 만남의 기회 부재 등 적절한 만남의 기회 부족이 최다빈도로 나타난 반면,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 남성은 결혼비용, 소득 부족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여성은 기대치에 맞는 배우자감을 찾지 못한 것, 일의 중요성, 기회 부족 등의 빈도가 높았다. 남성은 경제적인 이유, 여성은 일과 결혼생활의 병행에 대한 부담이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나, 남녀 모두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 만남의 기회 부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28세-40세 사이의 미혼 남녀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에게 적절한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 이성교제의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들에게는 결혼의 경제적인 부담을, 여성들에게는 결혼으로 인한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

28-40세 사이의 미혼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

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직종을 구분하여 성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5〉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성										
	반대	171	67	55	38	28	8	48	2	38	19
	%	30.7	26.1	29.7	27.0	32.6	16.3	29.4	18.2	33.2	33.9
	찬성	386	190	130	103	58	41	115	9	80	37
	%	69.3	73.9	70.3	73.0	67.4	83.7	70.6	81.8	67.7	66.1
	X2	1.822		.303		4.205**		.639		.051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다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성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반대	247	72	84	40	32	15	83	1	45	16
	%	44.3	28.0	45.4	28.4	37.2	30.6	50.9	9.1	38.1	28.6
	찬성	310	185	101	101	54	34	80	10	73	40
	%	55.7	72.0	54.6	71.6	62.8	69.4	49.1	90.9	61.9	71.4
X2	19.676***		9.854***		.599		7.221**		1.526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성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반대	315	90	113	50	48	18	92	2	58	20
	%	56.6	35.0	61.1	35.5	55.8	36.7	56.4	18.2	49.2	35.7
	찬성	242	167	72	91	38	31	71	9	60	36
	%	43.4	65.0	38.9	64.5	44.2	63.3	43.6	81.8	50.8	64.3
X2	32.618***		21.008***		4.547**		6.073**		2.773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성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반대	302	87	93	46	47	20	94	3	65	18
	%	54.2	33.9	50.3	32.6	54.7	40.8	57.7	27.3	55.1	32.1
	찬성	255	170	92	95	39	29	69	8	53	38
	%	45.8	66.1	49.7	67.4	45.3	59.2	42.3	72.7	44.9	67.9
X2	29.236***		10.187***		2.390		3.859*		8.012***		

주: \*p<0.1 \*\*p<0.05 \*\*\*p<0.01

결혼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에 대한 28세-40세의 전체 미혼 남녀의 생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종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판매서비스직의 남녀의 생각차이가 유의하였는데, 남성의 67.4%가 결혼의 가족 관계적 측면에 대해 찬성한 반면, 여성의 83.7%가 찬성하였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전체 남녀의 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였고, 여성이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사무직남녀의 찬성 비율이 남성이 54.6%, 여성이 71.6%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산·노무직도 유의한 남녀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남녀의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무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의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에 대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태도도 미혼 여성 중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6.1%, 미혼 남성 중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45.8%로 여성들의 긍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찬반이 전체 남녀, 각 직종별 남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는 달리, 한부모 가정에 대한 태도는 전문·준전문직, 생산노무직, 무직의 집단에서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 혼전동거 및 혼전성관계에 대한 태도

	성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반대	252	150	84	89	38	20	76	6	51	35
	%	45.3	58.4	45.4	63.1	44.2	40.8	46.6	54.5	43.2	62.5
	찬성	304	107	101	52	48	29	87	5	67	21
	%	54.7	41.6	54.6	36.9	55.8	59.2	53.4	45.5	56.8	37.5
	X2	11.96***		10.082***		.145		.259		5.647**	
결혼과 관계없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반대	199	137	67	84	27	20	61	3	41	30
	%	35.7	53.3	36.2	59.6	31.4	40.8	37.4	27.3	34.7	53.6
	찬성	358	120	118	57	59	29	102	8	77	26
	%	64.3	46.7	63.8	40.4	68.6	59.2	62.6	72.7	65.3	46.4
	X2	22.423***		17.558***		1.221		.457		5.572**	

주: \*p<0.1 \*\*p<0.05 \*\*\*p<0.01

혼전 동거에 대하여 28-40세의 전체 미혼 남녀의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결혼과 가족에 대한 문항들과는 달리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찬성 비율이 여성 보다 높았다. 28-40세 사이 전체 남성의 54.7%가 혼전동거에 찬성한 반면, 전체 여성의 41.6%만이 찬성하였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사무직, 무직 남녀의 찬성 비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혼인과 관계없는 성관계에 대한 태도도 혼전동거에 관한 태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전체 남녀의 태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문·사무직, 무직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들의 혼전 성관계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남성의 64.3%가 혼인과 관계없는 성관계에 찬성하였고, 여성의 46.7%가 혼인과 관계없는 성관계에 찬성하였다.

미혼 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중 이혼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들의 긍정 비율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높았으며 직종 별로는 전문·사무직, 생산노무직, 무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혼전 동거, 혼인과 관련 없는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들의 긍정 비율이 여성과 비교했을 때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전문·사무직, 무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4) 결혼의향,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조사대상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의향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들과 ‘결혼할 의향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결혼의향이 있는 집단과 그 외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8세-40세 사이의 미혼 남녀가 결혼할 의향이 있는 집단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는데 있어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갖는 효과가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나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찾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현재 연령이 높은 경우 결혼계획 연령을 당연히 현재 연령보다 높게 대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답한 결혼계획 연령에서 현재 연령을 차감하여 앞으로 몇 년 후에 결혼계획이 있는가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혼의향과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분석은 <표7>에 제시하였다.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 연령, 직종, 형제의 이혼, 부모의 이혼 여부로 나타났다.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인 경우,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하겠다는 의향을 갖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전문·사무직과 비교했을 때 무직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겠다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형제의 이혼, 부모의 이혼은 유의수준  $p<.05$ 에 근접하였는데, 형제의 이혼 경험, 부모의 이혼 경험은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겠다는 의향을 갖는데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 연령, 직종, 부모의 이혼경험으로 나타났다. 남성인 경우 여성과 비교해서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결혼계획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더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계획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사무직 종사자와 비교해서 무직의 미혼남녀는 보다 먼 미래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경험이 있는 미혼남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경험이 없는 미혼남녀와 비교해서 결혼계획 연령을 더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28-40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구분	결혼의향			결혼계획 연령		
	B	유의확률	odds ratio	B	β	유의확률
성 <sup>1)</sup>	.802	.001	2.231	.405	.136	.002
연령	-.115	.001	.892	-.133	-.288	.001
교육수준 <sup>2)</sup>	.172	.398	1.188	-.193	-.070	.139
로그가구소득	.163	.162	1.177	-.061	-.035	.452
판매서비스 <sup>3)</sup>	-.369	.171	.691	.047	.013	.777
생산노무	-.416	.132	.660	-.202	-.061	.228
무직	-.598	.021	.550	.302	.089	.074
부모이혼	-.600	.054	.549	.693	.117	.005
형제이혼	-.586	.053	.556	-.049	-.008	.838
상수	3.63	.002	37.774	6.600		.001
모형 X <sup>2</sup> / F	61.258***			7.808***		
R <sup>2</sup>				.117		
-2 Log 우도	816.932					

주: 1) 준거집단은 여성  
 2) 준거집단은 고졸이하  
 3) 준거집단은 전문·사무직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28-40세의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는 확률은 높으나, 결혼계획 연령은 높게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결혼의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것과 여성이 낮은 결혼의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직종으로는 전문·사무직과 비교했을 때 무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에 속할 확률이 높고, 결혼의향이 있다하더라도 결혼 연령을 뒤로 미루는 경향을 나타냈다. 부모의 이혼 경험, 형제의 이혼 경험과 같은 원가족의 결혼관련 경험이 28-40세의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직종에 따라 더 확대되거나 좁혀짐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의향, 배우자의 조건, 결혼하지 않은 이유의 남녀차이, 직종별 차이를 큰 범주로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좀 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질적연구를 위한 포커스 그룹을 직종, 성에 따라 구분하였고, 포커스 그룹인터뷰의 개념적 구성, 질문자료, 배경자료로 활용하였다.

## V. 면접조사 결과

총 10 FG의 51명의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사회문화맥락에 근거한 주제들이(Cultural Themes)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들은 미혼 남녀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현실 및 이들을 바라보는 동년배 그리고 부모 세대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다.<sup>12)</sup> 28세에서 63세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한 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혼 남녀들의 결혼지연에 관련된 총 6개의 문화특성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혼인 적령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보다는 자유의지에 의한 개인의 선택의 결과가 결혼이고 그 시기는 본인들이 결정한다는 사고가 주도적이었는데, 본인들의 결정 시기는 단순히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가족,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 하에서 사고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접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복잡하게 얽힌 개인을 둘러싼 생활, 문화 환경 속에서 미혼 남녀들이 겪어 가고 있는 현실적 생활상들과 그들의 인식의 변화들이 제시되었고 논의되었다. 미혼 남녀들의 내부자적 견해는(emic perspectives) 물론 동년배집단 그리고 부모, 상사 등의 Reference Group의 외부자적 견해를(etnic perspectives)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문화특성적 주제들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 1. 보편적 혼인적령기 규준의 약화현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결혼에 관한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결혼은 개인의 가치관과 Life Style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되었고 결혼을 역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의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고 있는 현세대의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30대 초중반(30-34)이면서도 아직도 나의 혼인 적령기는 오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계몽의 필요성을 발견 한다. 젊은이들의 의식의 변화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는 도도한 물결은 간단히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없지만 대중매체나 광고 등을 이용한 공공의 캠페인은 올바른 인생의 설계라던가 결혼의 시기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담론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면접조사 자료의 수집과정과 참가자들의 Profiles는 지면 상 생략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편 여성의 연령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이 출산 및 출산의 다양한 위험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정환, 2008). 그러므로 결혼의 지연이 단순히 개인적인 혼인조건의 충족여부를 떠나 그 후의 임신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 2. 길어진 교육 연한 및 직업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언

2007년도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대 청년인구의 70%이상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졸업의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엘리트교육이 아닌 직업개발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지는 직업세계의 현실이 세계적 추세임을 반영할 때,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교육 연한을 줄이는 제안보다는 늘어난 교육연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창출 및 확대를 제안한다. 외국과 같은 대학 캠퍼스내의 학생가족기숙사의 신설 또는 대학 내 탁아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혼인 적령기에 접어든 미혼 남녀의 결혼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결혼한 학생을 위한 학자금의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가족 수에 의거한 기초생계비의 일부의 지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3. 결혼 결정에 대한 부모의 중요한 영향력과 건강한 분리에 대한 제언

20-30대 성인 남녀의 결혼의사결정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결혼지연에 관한 사회적 대응방안의 주된 대상이 미혼남녀를 넘어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확대 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물질적 성취를 이룬 한국의 Baby-Boomer들은 본인들의 생활은 물론 자식들(성인자식포함)의 생활마저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과 성취에 대한 기대는 성인자녀들의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간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선위 세대로서의 결혼에 대한 조언은 발전적이지만 지나친 간섭은 자칫하면 성인자녀의 자율성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고 성인자녀가 원하는 결혼계획을 파국으로 이끌기도 한다. 이에, 성인자녀와의 애착관계에서 건강한 분리에 대한 중노년기 부모교육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본다. 또한 자녀와의 건강한 분리는 이미 성장한 자녀와 부모를 위한 단기적인 프로그램 이전에 가족의 발달주기에 따른 적절한 부모자녀관계의 정립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결혼적령기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초·중·고·대학의 교과과정과 그 시기의 부모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중재 필요성에 대한 제언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이성교제의 기회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지지가 요구된다. FG를 진행하면서 30대 중 후반의 연령대인 남성참가자들의 경우 일부는 결혼을 전제로 20대 초·중·후반의 여성들을 사귀고 있었고 이들의 결혼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성들의 결혼결정에 달려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조합의 경우, (여성 측) 부모의 반대로 인해 혹은 여성 자신의 의지로 인해 결혼이 지연되기도 한다. 반면에 연령차이가 적은 상대(30대 초 중반)와 교제를 하는 남성참가자의 경우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성교제의 경우, 연령의 차이가 좁을수록 그 성공의 확률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기회의 확대가 요구되고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적 모임, 등을 통해 동질혼적 요구를 채우기 위한 매칭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장, 지역 사회적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제안하는 바이다.

#### 5.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성에 대한 제언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결혼 시 남성은 집을 여성은 살림을 장만한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 공간 준비에 대한 남성들의 부담은 결혼의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주거에 대한 준비는 신랑 측 부모의 몫으로 돌아갔고 신혼살림과 혼수 등의 비용은 신부 측 부모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마련에 대한 남성들의 부담은 결혼의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남성들의 주거마련 비용 증가는 여성들의 혼수, 살림마련 비용증가를 유발하고 있어, 전반적인 결혼 시작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FG에 참가한 미혼 남녀는 물론 기혼 남녀 그리고 부모세대의 참가자들이 가장 우선시한 대책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이었다. 부부가 전세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 예로 최대 5년까지- 국가가 임가의 소형 임대 주택/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아울러 제1 금융권에서 용자와 대출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소득능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결혼자금의 대출의 증가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나친 혼수와 기타 결혼 비용에 대하여 부모세대의 참가자들은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는데, 특히 아들을 가진 부모들의 의식개혁이 있어야만 불필요한 혼수와 예단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혼수와 예단의 과소비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결혼장려를 위한 국가의 정책의 명확한 전달체계에 관한 요구에 대한 제언

정확한 정책관련 정보가 전달되기 위한 수단으로써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신문을 꼽았다.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결혼준비를 위한 많은 정보를 한곳에 모은 웹사이트가 개발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반응을 참가자들은 보였는데 특히 인기도가 높은 포털사이트에 연결하는 것도 웹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는 제안도 하였다. 각기 다른 FG에 참가한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웹사이트의 메타포는 구직 사이트와 같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였다. 즉 방문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정부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하여 결혼관련 자원센터를 웹사이트로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외국의 경우,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서비스 지원의 트렌드가 물리적 센터 중심에서 전자정부적 센터(웹사이트)로 점차 옮겨지는 것을 볼 때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결혼자원센터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하다 여겨진다. 결혼자원센터의 경우,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교육관련 콘텐츠는 물론 물물교환장터나 정보공유 BBS를 포함하는 단계를 넘어서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준비와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 사료된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모기주택 모기기 계산기가 무료로 웹사이트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신혼부부는 물론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주로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빚 그리고 수입을 간단히 계산기에 입력함으로써 단기 혹은 장기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주택 모기지를 납입해야 하는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두 번째로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센터의 43개 주의 웹사이트 들이다. 미네소타,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하와이 등의 웹사이트들을 살펴보면 각각 주의 특성에 맞추어 각기 다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주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의 공통점은 상호작용을 증가시킨(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로 하여금 국가복지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체감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서비스의 전달체계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 불가능해 보이는 양질의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가 전자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 졌다(Auh & Shelley, 2007). 이러한 웹사이트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7. 보편적·지속적·체계적 결혼장려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제언

면접대상자 대부분이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결혼장려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 지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출산보조금 지원 등의 단발적인 정책은 그들을 결혼으로 이끄는 아무런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현금지원에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정부의 단편적인 결혼 장려 정책은 오히려 다자녀 양육이 가능한 중산층 집단의 결혼의 결정 시기와 출산 시기를 늦추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결혼장려 정책들은 그 대상이 한정되므로, 전문직 미혼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옛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사람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 쌍의 성인 남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온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 8. 일-가정 양립에서 일-데이팅 양립을 위한 제언

면접결과 20대 중·후반의 미혼남녀가 이성을 만나고,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운 직장과 사회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미혼남녀의 평균 결혼연령을 현재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20대 중·후반의 사람들은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도한 경쟁사회에서의 과중한 업무시간, 비정규직의 불안함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생각할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20대 중·후반 세대가 일 중심에서 생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담론에 기초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어 지고 또한 그들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꼽힌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도출된 문화특성적 주제들은 200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남녀들과 그들의 동년배 그리고 부모·상사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Life Style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발견된 주제들과 관련한 사회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겠다.<sup>13)</sup>

13) 본 연구에서는 면접 조사와 더불어 국내외 결혼장려 정책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혼지연에 영향을 주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면 사정상 본 발표에는 국내외 결혼장려 정책들에 관한 부분은 생략되었으므로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조희금·고선강·어성연(2008)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VI.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세대적 요인

- 1) 결혼관의 변화 - 약해진 결혼 규범
- 2) 강해진 자아실현의 욕구 - 교육 연한의 증가
- 3) 길어진 교육 연한과 높은 청년 실업율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침체에 따른 20대 남녀의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 부족
- 4)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증가한 소득수준 그리고 이에 따른 상승혼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배우자 Pool의 부족
- 5) 교육수준이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남성들의 배우자 Pool의 부족
- 6) 혼기를 지난 30대 남녀의 만남의 기회의 양극화 - 빈익빈 부익부의 기회
- 7) 배우자 선택 및 결혼결정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영향력 V.S. 결혼 당사자의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의존성

### 2. 사회적 요인

- 1) 결혼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미비
- 2) 기존 결혼관련 국가 정책의 낮은 가시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
- 3) 건강한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을 지원하는 사회교육 서비스나 매칭 프로그램의 미비, 등이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 지연에 영향요인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 하기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여성들의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 부모의 결혼과정 개입을 줄이고 자녀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한 가족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 3. 정책적 제언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sup>14)</sup>

## 가.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한 결혼관 확립을 위한 캠페인의 전개

우리사회에 건강한 결혼관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중을 상대로 한 지속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정책사례에서와 같이 대중매체에 데이트와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장면들의 지속적인 노출은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벤치마킹의 사례로 2008년 시행되었던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계몽을 통하여 건강한 결혼관을 함양 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미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은 결혼을 통한 이득보다는 부담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 직종별로는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여성들은 일과 결혼의 양립의 어려움을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하였고, 일에 대한 성취에 결혼이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일을 지속할 경우 제대로 된 엄마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할 시기의 미혼여성들에게는 결혼과 가족,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지속적인 이미지 캠페인이 필요하다. 결혼이 직업과 일에 대한 성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꾸준한 마스크 홍보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혼 남성들에게는 결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홍보와 결혼생활에서의 가사분담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미혼 남성들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 특히 주거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를 경감시켜주는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는 미혼 남성들이 결혼에 대한 적극성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미혼 여성들의 일과 결혼의 병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미혼 남성들에게 가사노동 수행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캠페인이 요구된다.

캠페인은 본 연구 결과 나타난 성과 직종에 따른 결혼지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제로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캠페인의 방식 또한 성과 직업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를 분석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총체적이고도 맞춤형의 결혼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체계 구축

본 연구는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중재의 필요성과 더불어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대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미혼남녀를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

14) 지면관계상 두 가지 방안만을 제시한다.



고도 지속적인 정책이 되어야만 하고 또한 그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전달될 때에 비로소 그 정책의 가시성도 증가하고 국민들의 관련 요구들이 충족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20~30대 성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이 언급되었다. 2006년도 한국정보통신개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20~35세 성인의 9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결혼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단계는 바로 결혼관련 종합정보(information clearing house)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구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개설된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지원센터의 웹사이트(www.match.kr)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의 가시성이 매우 낮은 점 그리고 매칭 서비스에 중점을 둔 제한적 서비스, 등에 의해서 총체적인 결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 결과, 만남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많은 참가자들이 언급을 하였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매칭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여성 참가자들에 의해서 표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골적인 매칭 프로그램 보다는 교육적 기능과 이성의 만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혹은 직종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ortal의 기능을 갖춘 웹사이트의 구축이 그 첫 단계의 과업의 하나가 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결혼장려정책 서비스인 Social Development Unit (SDU)와 Social Development Service (SDS)를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한다. SDU와 SDS는 국가가 매칭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활동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발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통해 개인들의 만남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증가 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노골적인 매칭 프로그램에 대한 미혼남녀들의 거부감들은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완화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정확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정보 (information clearing house) 사이트의 기능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 되었듯이 사용자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상업적인 정보들도 검색이 가능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첫 번째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벤치마킹을 위해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된 웹사이트는 ‘구직사이트’ 그리고 ‘벼룩시장’ 등 이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결혼과 관련된 정확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또한 상업적 사이트나 혹은 다른 웹사이트와 연결하는 Portal 시스템의 구축

이다. 아무리 잘 만든 전자정부적 서비스체제라 할지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가시성이 낮으면 그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웹사이트가 구축이 되면 가시성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뒤 따라야 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Search Engine에 링크를 하거나 조그만 박스로 홍보할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는 정확하고도 총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가 더욱더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와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정보를 Update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단계 이후의 전자정부의 진화의 단계는 맞춤형 서비스 전달을 위한 로그인 기능을 갖춘 상호작용적 전자민원 시스템의 구축이다. 다른 전자정부의 웹사이트와 같이 로그인 기능을 갖추게 되면, 개인의 정보가 저장되고 개인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이나 전자 민원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수입, 나이 그리고 교육수준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에 경제 수준에 맞는 신혼부부용 주택 마련을 위한 재정적 플랜의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준다거나 혹은 이러한 시나리오의 검색 후 자신이 선택한 시나리오를 저장하고 있다가 추후에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미혼 성인남녀의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의 가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벤치마킹 용 웹사이트로 미국의 주택마련 계획을 돕는 몰기지 칼큘레이터 웹사이트를 추천한다. 아울러 좀 더 선진의 총체적 전자서비스의 예로 미국의 노인과 가족을 위한 자원센터의 웹사이트(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ADRC), 등을 추천한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하와이 그리고 뉴저지 등의 웹사이트를 보면,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자신의 요구에 대한 선택 리스트를 간단히 선택하면 각각의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등의 리스트의 제공은 물론,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보가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의 전산망에 연결됨으로써 질적인 대 국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로 ADRC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축 이전에는 한 개인이 3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3종류의 신청서를 각각의 해당 관청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처리기간도 최소 2주에서 3개월 등 민원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자정부서비스로의 행정전환 이후에는 초기 웹사이트에 등록할 때 작성한 서류가 모든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eligibility가 충족되면 서비스가 개시가 된다. 이로서 이전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간의 단축은 물론, 개인의 사소한 요구까지 파악되어 맞춤형 서비스의 전달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의 I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 하지만 I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비용적 효율성도 뛰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로그인 기능을 통한 개인의 정보의 입력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저장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시기가 되면 매칭 프로그램의 실험적 실시도 제안하는 바이다. 여성들의 경우 기존의 매칭 서비스의 여성에게 불리한 시스템에 많은 불만을 표출 하였고 이러한 불만은 불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자신이 매칭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에 대한 비밀의 보장과 인성 테스트 등의 결과 그리고 희망 배우자상, 등의 정보가 반영된 총체적인 측면이 고려된(경제적 측면, 인성적 측면, 종교, 가정의 배경, 개인의 선호, 등) 매칭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기존의 프로그램들 보다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가 되어 질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 문헌

- 김두섭 외(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서 07-18-02.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유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정환(2008),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 및 신생아 건강문제, 보건복지가족부, 제2차 저출산대책 포럼 자료집
- 은기수(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 은기수(2004). 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
- 이삼식 외(2006).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 조병구·조운영·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최세은·옥선화(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53-73.
- Auh, S. & Shelley, M. (2007, September). Evaluation of Iowa Department of Elder Affair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Reported to Iowa Department of Elder Affairs. Ames, IA: Research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Auh, S. & Shelley, M. (2007, December). A comparison study on the E-governmen services in the U.S. and the other countries'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Reported to IEM Center for Government Business.
- Auh, S. (2006, April). Semi-Annual Report of Iowa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Reported to Administration on Aging, Center for Medicaide and Medicare, and Lewin Group. Baltimore, MD: Lewin Group.
- Brewer, J. & Hunter, A. (1989). Multi-method research: A synthesis of styles. Newbury Park, CA: Sage Pub.
- Johnson, B. & Christensen, L. (2004). Educational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Approaches. New York: Pearson, Co.
- Johnson, R. B. & Turner, L. A. (2002). Data collection strategies in mixed methods research. In A Tashakkori & C. Teddlie (eds.),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pp. 297-319). Thousand Oaks, CA: Sage.
- Webb, E. J., Campbell, D. T. , Schwartz, R. D., Sechrest, L., & Grove, J. B. (1981). Nonreactive measures in the social sciences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발표 4

### 일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고용율과 출산을 제고 대책

---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제고대책

최숙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2008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발표되어 전년의 1.25명에 비해 하락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의 출산율이 2008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의 제고는 상당히 어려운 정책과제이다.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한 국가 중의 하나인 프랑스도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15년이 소요되었다. 1970년 2.47명이던 출산율이 1993년 1.65명으로까지 감소하였고, 2008년이 되어서야 다시 2.02명으로 회복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을 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의 중심에는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주어지는 각종 재정적 뒷받침이 있다.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02년 출산율이 1.17명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심지어 2005년에는 1.08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 후 다소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2008년의 경제침체 국면으로 인해 향후 상당기간 출산율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출산율 제고 정책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고용과 자녀양육은 대체관계에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최근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한 다양한 휴가, 탄력근무제,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제 등 탄력적인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고찰해 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 고용율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출산율과 여성고용율의 동시 상승이라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음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저출산 대책의 효과 분석<sup>15)</sup>

저출산에 대해 다양한 원인과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통계자료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시계열 자료의 경우, 장기간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OECD(d'Addio, 2005)의 연구모형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20개 국가<sup>16)</sup>의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1〉 저출산 대책요인 및 사용자료 (분석대상: OECD 20개 국가)

구분	변수명	내용	단위	평균	표준 편차
자녀비용 경감	직접비용	대리변수: 두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정과 무자녀 맞벌이 가정의 순소득 차이*를 기존 소득 대비로 표시	%	8.21	3.94
	기회비용	대리변수: 맞벌이 가정과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정의 소득차이를 기존 소득 대비로 표시	%	74.03	38.88
사회·직장 환경조성	파트타임	전체 여성 고용자 중 파트타임 고용자의 비중	%	73.21	7.40
	부모휴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모의 휴가 기간	주	51.82	41.98
	남성일자리 우선권*	일자리에 있어 남성일자리우선권 더미(dummy)변수 (남성일자리우선권이 낮은 경우 = 1)	0, 1	0.55	0.51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이용	3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	71.80	21.48
	유급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 비율	%	81.89	24.84

주: 1) 순소득(net income) = 전체 소득 - 소득세 - 사회보장기금 + 사회지원(최저생계비) + 실업, 주거 및 가족 관련 지원 + employment conditional benefits

2)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경우,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OECD 평균 12%보다 낮으면 남자가 평등한 것으로, 그보다 높으면 불평등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이 비율이 각각 9%, 8%,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각 1%, 2%로 나타났으나, 한국과 일본은 각각 14%, 16%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양성평등 수준이 낮았다. 이 비율은 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하여 계산되었으며, d'Addio, Anna Cristina and d'Ercole, Marco Mira,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Sep. 2005에서 인용하였다.

사용자료 중 비용 관련 변수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의 형태로 구해서 사용하였다.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은 2004년 기준 OECD의 “Tax/Benefit” 모형 관련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비용은 자녀 2명인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없는 맞벌이

15) 최숙희·김정우(2006),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pp15-19.

16)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20개 국가이다. 관련 통계자료는 OECD, Benefits and Wages: gross/net replacement rates, country specific files and tax/benefit models, 2006; Whiteford, Peter,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Paper for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Finnish Social Policy Association, 2005; d'Addio, Anna Cristina and d'Ercole, Marco Mira,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Sep. 2005의 데이터와 표를 참고하였다.



부부의 순소득 차이로 구했다. 기회비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을 목적으로 직장을 포기했을 경우의 비용으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와 1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순소득 차이를 나타낸다. 보육시설 이용 관련 변수는 3세에서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공공시설에 위탁, 보육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는 보육시설에 맡기기보다는 부모나 친척이 직접 키우거나, 외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기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연령인 3세 이상으로 국한하였다.

수집 가능한 OECD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출산과 관련된 각국의 직·간접비용, 보육 상황,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모형에 반영했다. 상기 변수로 구성된 선형모형을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정모형과 변수는 다음과 같다.

추정 모형:

$$TFR_i = \alpha + \beta_1(DICost_i) + \beta_2(OPCost_i) + \beta_3(PWEmp_i) + \beta_4(PLeave_i) + \beta_5(Equ_i) + \beta_6(FCare_i) + \beta_7(MRate_i) + \epsilon_i$$

*TFR* : 합계출산율, *DICost* : 직접비용, *OPCost* : 기회비용, *PWEmp* : 파트타임

*PLeave* : 부모휴가, *Equ* : 남성일자리우선권, *FCare* : 공공보육시설 이용

*MRate* : 유급출산휴가, *i* : OECD 20개 국가,  $\epsilon$  : 교란항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유급출산휴가, 부모휴가의 추정치 부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호가 사전적인 기대와 일치했다. 부모휴가 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분석 전의 기대와는 달리 음(마이너스)의 결과가 나왔으나, 그 크기가 0에 가깝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아서 합계출산율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모형 추정결과

독립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직접비용	-0.01707		0.01504	-1.14	0.289
기회비용	-0.00346	**	0.00149	-2.33	0.048
파트타임 비중	0.00709		0.00671	1.06	0.321
부모휴가	-0.00003		0.00109	-0.02	0.982
남성일자리우선권	0.24733	**	0.08492	2.91	0.020
보육시설 이용	0.00462	*	0.00205	2.26	0.054
유급출산휴가	-0.00489	**	0.00155	-3.15	0.014

주: \*, \*\* 각각 10%,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통계적 유의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기회비용, 공공보육시설 이용 정도, 유급출산휴가, 남성일자리우선권에 대한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급출산휴가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부호가 기대치와 반대라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즉, 유급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기간과 합계출산율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추정결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휴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오히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대책에 대한 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모형의 추정치 크기를 보면, 남성일자리우선권에 대한 더미변수가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가치관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이 요인의 변화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변수에는 관련 소득, 주거 관련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혹은 국가적 지원이 포함된다. 또 추정 시 사회·직장환경 개선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여성 고용자의 파트타임 비중도 다른 변수들에 비해 추정치가 크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추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성 직장생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출산율 장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17)</sup>.

본 연구에서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증감할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분석대상 요인들의 민감도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증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 중 남성일자리우선권과 부모휴가의 단위는 %가 아닌 0과 1로 구성된 더미이거나 기간을 나타내며, 단위가 %인 변수들도 그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 대비 변화 정도를 나타내지만 유급출산휴가, 파트타임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의미한다. 특히 양성평등 관련 변수의 경우 분석 모형에서 더미변수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구해진 값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평등 상태로 이전할 때의 합계출산율 변화 정도(shift)를 의미하므로 비교시 주의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별로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요인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파트타임, 보육시설 이용, 자녀비용과 출산휴가의 유급 비율이 각각 10.0%p 증가되었을 때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남성일자리우선권(양성평등 변수)의 경우,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0에서 1로 변했을 때의 영향을 의미한다.

17) 저출산 대책으로 모형 내에서 고려되고 있는 요인들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녀비용 이외에도 가계의 비용 부담이 적은 공공보육시설 보급 정도와 출산율이 연관되어 있으며, 유급출산휴가와 부모휴가 등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형 추정 시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 대책별 출산율의 영향 정도

(단위: 명)

자녀비용 경감	사회·직장 환경 조성		보육환경 개선	
	직접·기회비용	파트타임 비중	남성일자리우선권	보육시설 이용
-0.205	0.071	0.247	0.046	-0.049

주: 각 대책이 10%p 증가 시(단 남성일자리우선권의 경우는 0에서 1로 변화 시) 출산율을 얼마나 증감시키는지를 의미한다.

‘자녀비용 경감’, ‘사회·직장 환경 조성’, ‘보육환경 개선’으로 다시 정의한 요인에 대해 합계출산율의 요인별 민감도를 측정된 결과, 수치상으로는 ‘사회·직장 환경 조성’의 하나인 남성일자리우선권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용변수가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양성평등 환경이 조성되면 0.25명 정도의 합계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파트타임 비중이 10.0%p 증가할 때에는 합계출산율이 0.07명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인 ‘자녀비용 경감’이 소득 대비 10.0%p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21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10.0%p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05명 정도 향상되었으나, 출산휴가의 유급 비율은 오히려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기업부문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분석<sup>18)</sup>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여건은 여성 고용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출산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잘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sup>19)</sup>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EU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50% 정도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친가족적 근로 환경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공 부문일수록 잘 조성되어 있다. 적어도 OECD 20개국에서는 현재 출산 및 육아휴직 총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다.<sup>20)</sup> 고용이 보장되는 출산휴가는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정책이 무엇이든 간에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직장에서 조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18) 홍승아 외,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pp185-192.

19) 30대 여성은 자녀 양육에 의해 고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고, 쉽게 대체가 가능한 고용자의 경우에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sup>21)</sup> 가족 친화적인 근무 여건은 근무의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2)</sup>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업부문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여성 고용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계량모형을 시도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자료설명

분석을 하기에 앞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조건에 관련하여 근로자와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된 자료는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와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가 유일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위 두 자료는 기업부문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하여 주요한 자료의 제공처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부문에 관한 효과분석에 사용된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EU자료인 위의 두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미국, 일본과 한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탄력근무제 사용여부와 부모휴가의 이용비율, 일과 생활의 양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Fo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EWCS; 2007)와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ESWT; 2006)를 통해 수집되었다. 그 결과 EU 20개국이 선정되었는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터키 등 20개국 자료가 사용되었다.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EWCS)”는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1-3차 설문은 각각 1991년, 1995년과 2000년에 수행되었고, 4차 설문이 2005년 9월 19일-11월 30일에 이루어졌다. EU 31개국 약 30,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상황에서 근로 조건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의 100개 항목이 질문되었다. EWCS는 EU 각국의 서로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설문조사이다.

또 다른 주요 설문자료인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21) Kiser, S. J., “Friendly to Whose Families? A Case Study of the Delivery of Work-Family Benefits in a Model Firm”,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draft of 22 November, mimeo, 1996.

22) Dex, S. and Scheibl, F., “Business Performanc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Vol. 24(4), Summer 1999.

Balance(ESWT)” 역시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에 의해 2004-2005년에 수행되었다. EU 21개국에서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21,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일과 생활의 균형 등에 대해 조사되었다. ESWT는 EU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국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2) 변수설명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 고용률은 25-54세 여성의 2006년 고용률을 사용하였다. 여성 고용률은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여성 취업자수의 비중이다. 여성 파트타임비중은 25-54세 전체 여성 취업자 중에서 파트타임의 비중으로 2006년 자료가 사용되었다. 총 모성육아휴가는 모성과 육아휴가의 총계이다. 자료의 한계에 의해 Whiteford(2005)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휴가급여율은 Fagan & Walthery(2007) 자료가 사용되었다. 두자녀/무자녀 가구간 가처분소득차는 Jaumotte(2003) 자료에 의해 두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나타낸다. 일과 생활양립만족도비율은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2007) 자료로서, 일과 생활의 양립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서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근로탄력성은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2007) 자료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고용주가 정하는지 근로자가 정하는지를 나타낸 비율로서, 근로자가 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에 직원 중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Parental leave in European companies(2007)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표 4〉 효과분석에 사용된 자료(분석대상: EU 20개 국가)

구분	국가수	단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오차
여고용률a	20	%	27	82	69.86	12.16
여성파트타임비중b	20	%	4.2	59.7	25.10	13.17
총모성육아휴가c	20	주	12	180	95.64	51.97
휴가급여율d	20	%	66	100	89.10	13.32
두자녀/무자녀 가구간 가처분소득차e	20	%	0	21	9.00	5.63
일/생활양립만족도비율f	20	%	57.9	88.1	79.38	8.25
근로탄력성g	20	%	21.0	61.2	39.08	11.20
지난3년간직원중부모휴가사용비율h	18	%	25	89	54.22	13.68

자료: a) & b)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c) Whiteford, Peter,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2005; d) Fagan, Colette & Walthery, Pierre,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ime Policies for Reconcilia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Modernising Social Policy for the New Life Course, OECD, 2007; e) Jaumotte, Florenc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37, 2003; f) & g)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7; h) Fagan, C., Smith, M., Anxo, D., Letablier, M. & Perraudin, C., “Parental leave in European companies”, European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2007.

### 3) 추정모형

기업부문에서의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고용률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였다.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수록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과 가족이 양립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고용률은 증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의 중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계량모형 분석에서는 기업부문에서의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부문 변수가 여성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집 가능한 EU, OECD와 기타 보고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고용률과 관련된 각국의 통계자료를 모형에 반영했다. 상기 변수로 구성된 선형모형을 통상최소사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정모형과 변수는 다음과 같다.

$$FEMP_i = \alpha + \beta_1(WLB_i) + \beta_2(MPL_i) + \beta_3(PaidL_i) + \beta_4(FlexTime_i) + \epsilon_i$$

*FEMP* : 여성 고용률, *WLB* : 일과 생활양립만족도 비율

*MPL* : 지난 3년간 직원중 부모휴가사용 비율, *PaidL* : 휴가급여율

*FlexTime* : 근로탄력성, *i* : EU 20개 국가,  $\epsilon$  : 교란항

### 4) 모형추정 결과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독립변수의 추정치 부호가 정(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여성 고용률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생활 양립 만족도 비율과 지난 3년간 직원 중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여성 고용률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휴가급여율과 근로탄력성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정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모형의 추정치 크기를 보면, 일과 생활의 양립 만족도 비율이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있어 일과 생활의 양립 가능성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지난 3년간 직원 중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휴가급여율과 근로탄력성 순으로 중요 요인이 결정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모형 내에서 고려되고 있는 요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형 추정시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모형 추정결과

독립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상수	6.411	12.843	0.499	0.626
일/생활양립만족도비율	0.583***	.132	4.427	0.001
지난3년간직원중부모휴가사용비율	0.197*	.095	2.059	0.060
휴가급여율	0.074	.084	0.880	0.395
근로탄력성	0.039	.116	0.336	0.743

주: \*, \*\*\* 각각 10%,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여성 고용률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요인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과 생활 양립의 만족도 비율, 지난 3년간 직원 중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 휴가급여율과 근로탄력성 비율이 각각 10.0%p 증가되었을 때의 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일과 생활 양립의 만족도 비율이 10%p 올라가면 5.83%의 여성 고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직원 중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10.0%p 증가할 때에는 여성 고용률이 1.97%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휴가급여율이 현재보다 10.0%p 증가할 때 여성 고용률은 0.7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탄력성 비율이 10.0%p 증가할 때 여성 고용률은 0.39%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시사점

Jaumotte(2003)에 의하면, 육아보조금과 유급 부모휴가는 파트타임보다 풀타임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여성의 고용참가율은 증가하고, 적어도 몇 개국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여성의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실증연구 결과, 육아보조금은 확실히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성 고용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동수당(child benefits)이 육아보조금(childcare subsidies)보다는 덜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성휴가, 부모휴가, 육아휴가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 고용율을 촉진한다. 일자리 보호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연속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급 부모휴가가 OECD 9개국의 고용율을 증가시켰다는 실증 분석결과도 있다(Ruhm, 1998). Jaumotte(2003)는 다변량 계량분석(Multivariate Econometric analysis)을 통해 파트타임 비율, 육아, 유급휴가가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반면, 가구의 두 번째 소득자(APW의 67% 소득 수준에서 측정된)와 단독 개인 간 조세격차(tax wedge)는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낮춘다고 분석하였다. Chevalier &

Viitanen(2002)의 영국 사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육아 보조가 여성의 고용참여율에 영향을 주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Gelbach(2002) 또한, 미국의 결과에서 육아보조로부터 여성 고용참여율에 대한 강한 인과관계를 보였다.

위의 계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8.9%<sup>23)</sup>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sup>24)</sup>이며, 여성 고용 중 파트타임의 비중도 한국이 12.5%에 불과해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율이다. 학업, 가사 등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나 고령자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 전환 청구권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여성, 청년,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단시간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길 원할 경우 이를 기업 측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금은 비례산정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단시간 근로권(Part Time Right)<sup>25)</sup>이란 상용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원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둘째,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증진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간호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의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로서 고용증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사업주가 보육수당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할 경우에도 고용증진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증진을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

23)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24) 2007년 전체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OECD 유럽 평균 16.1%, 네덜란드 36.1%, 호주 24.1%, 스위스 25.4%, 영국 23.3%, 독일 22.2%, 프랑스 13.4%, 미국 12.6%이다. 그리고 여성 고용 중 파트타임의 비율은 OECD 유럽 평균 28.7%, 네덜란드 60.0%, 호주 38.5%, 스위스 45.6%, 영국 38.6%, 독일 39.2%, 프랑스 23.1%, 미국 17.9%이다.

25) 최저임금위원회,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2003.2



의 정착과 단시간근로 및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기업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로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할 경우에 파견되는 산업현장 대체인력에 대해 1인당 20만~3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현재의 20만~30만 원에서 더 확대하거나 월급의 일정 비율로 인상하거나,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임금 등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 단시간근로 근무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정착에 기반이 되는 대체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손비처리 확대, 각종 규제의 완화, 모범기업 표창 및 인증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풀타임과 단시간근로간의 격차도 해소되어야 한다.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 및 노동시간 유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크게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와 남용방지를 통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sup>26)</sup> 다양한 단시간 근로형태의 작업 스케줄이 제시되고 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적절하게 표출될 수 있다면 잠재인력으로 숨어있는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제도와 가족간호휴가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영아를 둔 여성이 향후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가 현재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영아는 육아에 비해 탁아비용도 훨씬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정서상으로도 부모와 긴밀한 접촉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부모가 영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부모휴가 등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실제로 스웨덴은 부모보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다. 서구 유럽 국가 가운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여성이 담당해왔던 가족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족과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보호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가족간호휴가제도는 가족이 아플 때 여성근로자에게 3개월에서 최장 1년간 휴가를

26) 정원호, 유럽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략 연구: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11.

주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뿐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대부분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 보장을 위해 권장사항으로 실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이인재외,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4. 11, pp184-18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 2007.2
- 정원호. 2004. 유럽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략 연구: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숙희·김정우,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9
- 최저임금위원회,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2003.2
- 홍승아 외,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Andersson, G., "Fertility developments in Norway and Sweden since the early 1960s", Demographic Research, Vol. 6(4),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2002, pp. 67-86.
- Blau, D. M. and Robins, P. K., "Child Care Costs and Family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1988, pp. 374-381.
- Blau, D. M. and Robins, P. K.,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Vol. 25(2), 1989, pp. 287-299.
- Chevalier, A & Viitanen, T.,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9, Issue 14, November 2002, pp. 915-918
- d'Addio, Anna Cristina and d'Ercole, Marco Mira,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Sep. 2005.
- Dex, S. and Scheibl, F., "Business Performanc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Vol. 24(4), Summer 1999, pp. 22-37.
- Ermisch, J., "Purchased Child Care, Optimal Family Size and Mother's Employment: theory and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pp. 79-192, 1989.
- European Commission, "Care in Europe", Directorate 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Brussels, 1998. 9.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7.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in European companies (ESWT 2004/2005)", 2006.

- Fagan, Colette & Walthery, Pierre,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ime Policies for Reconcilia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Modernising Social Policy for the New Life Course*, OECD, 2007, pp75-116.
- Fagan, C., Smith, M., Anxo, D., Letablier, M. & Perraudin, C., "Parental leave in European companies", *European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2007.
- Gelbach, J.B., "Public Schooling for Young Children and Maternal Labor Sup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Issue 1, March 2002, pp. 307-322.
- Jaumotte, Florenc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37, 2003, pp51-108.
- Kiser, S. J., "Friendly to Whose Families? A Case Study of the Delivery of Work-Family Benefits in a Model Firm",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draft of 22 November, mimeo, 1996.
-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2007.
-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 2007*.
- OECD, "Modernising Social Policy for the New Life Courses", 2007.
- Røsen, M.,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Norway - A reflection on trends and possible connections", *Demographic Research*, Vol. 10(10),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2004, pp. 264-286.
- Ruhm, C.,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Lessons from Europ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Issue 1, Feb. 1998, pp. 285-317.
- Whiteford, Peter,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2005.10.

**MEMO**



**MEMO**



**MEMO**



**MEMO**

---

---